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하루소식

제1769호 ~ 제1886호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정보자료실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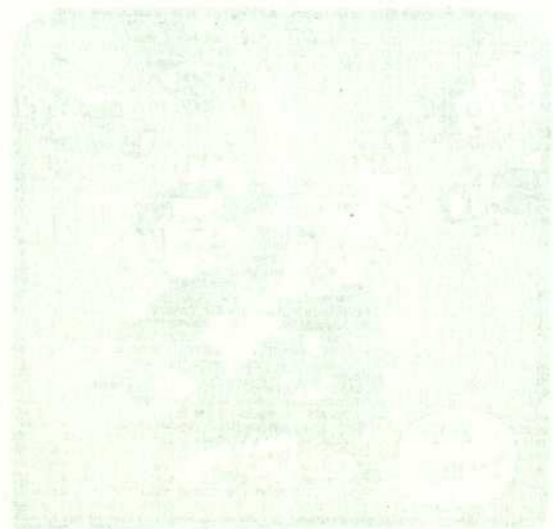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2001년 1월

(제1769호 - 제1782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5일(금)

제 17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인권활동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5일로 9일째에 접어들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민중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등 13~14명이 지난 12월 2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한 농성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일까지 단식농성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지지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인권관련 법안과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등을 묶어 공동의 투쟁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여성민우회를 처음으

로 발표된 성명은 3일 민연련·민주노동·한총련, 4일 천주교청주정의평화위·전교조 등 10여 개 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런 움직임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이 교회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에 참가하고, 참여연대가 농성에 참가했다. 또 민연련이 5일, 만화가들의 모임인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이 6일부터 단식농성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지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몇몇 사회단체 회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하던 촛불집회는 40명 수준이던 것이 지난 2일 40여명, 3일 70여명으로 증가하다 4일 촛불집회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인권관련 2대 법안의 국회처리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불리함을 타고도 이런 움직임을 불러일으킨 것은 결연한 노숙 단식 및 연좌농성,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등 치열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일 단식농성에 결합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따뜻한 방에 있는 것 보다 여기에 오니 더 편하다"는 소감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투쟁의 고평을 바짝 죄어야

투쟁의 고평을 바짝 죄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2월로 예정됐던 '2000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평가'를 1월 중에 앞당겨 실시하고, 국가보안법·국가인권위법·부패기본법을 고리로 한 각 연대체가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월에 큰 싸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12월 29일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부'에 보낸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때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 대가는 실망과 좌절과 배신 뿐"이라는 성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로비에 기대는 활동대신에 "전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권의 무릎을 꿇게"하는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3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각각의 연대체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9일 인권활동가들이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움직임을 분명히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4일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당론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심보선)

만화사랑방



이동수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작동 '인권국가' 성찬 속에 7조로 구속

2001년 첫날부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다. 경찰은 1일 0시 40분 경 서울 종로에서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의 '송구영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2000년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22, 반도체4)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씨 연행 직후 동국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인옥, 아래 비대위)를 구성하고, 1일 오후에는 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 관계자들과 함께 이씨가 유치돼있는 동부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일 구속됐으며 현재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이씨를 접견하고 온 사람에게 의하면 "경찰은 승복이가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은 이유와 작년 서총련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구속에 대해 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흥민(22, 지리교육4)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끊임없이 구속하고 있다"며 "이 나라가 정말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 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며 "우선은 승복이의 구속취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심태섭)

단식농성단에 연대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청와대·민주당에 전화·팩스·홈페이지 항의

·청와대 : 전화 02-770-0027 / 팩스 02-770-0202
www.cwd.go.kr에서 '열린청와대'에 의견쓰기

·새천년민주당 : 전화 02-784-2855 / 팩스 02-761-0550
www.minjoo.or.kr에서 '자유계시관'

◎농성단에서 발행하는 속보를 받고 싶은 사람은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02-741-5363)

**2001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고자제·성실교섭 약속 공수표 한동계약직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긴 채 계속되고 있다.

4일 오후 3시 경 경기도 분당의 한국통신 본사 앞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 학생들로 빼곡했다. 2일부터 시작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4차 상경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3일 제 투쟁 중인 이랜드 노동자들도 집회에 함께 해 연대의 정이 돋보였다.

한국통신 사 측은 11월 30일자로 1천명을 해고한데 이어, 12월 31일자로 또다시 6천명을 해고했다. 동시에 계약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사 측은 교섭 기간 내에 해고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 측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도급업체를 통해 일을 계속 하라고 노동자들을 구슬리고 있다"고 흥준표 계약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자들은 도급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계속 보장될 리 없고, 그마저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선로가설, 선로유지 보수와 같이 꼭 필요한 업무를 단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도급으로 전환하는 게 노동자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집회 참가자들은 '구조조정 저지! 해고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로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12월 30일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숙 농성에 이은 이번 4차 상경 투쟁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예정이다. 선로가설 일을 하다 12월 말로 해고된 이재인 씨는 이번 투쟁을 위해 경상북도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 씨는 "선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악은 투쟁의 대상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설의 글귀를 인용해 한국통신에서 얼마나 부당한 처사를 자행했는지를 대변했다.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후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랜드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현안으로 삼아 파업중인 각 사업장의 쟁의결과는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 이들의 문제를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6일(토)

제 17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뻗뻗하고

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간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문전박대를 당한지 몇시간 후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중인 인권활동가들을 이끌던 상황실장이 쓰러졌다. 노상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던 5일 오전 9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등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김중권 대표가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고 활동가들이 '곡기'를 끊고 노상에서 연좌농성 중인 명동성당으로 돌아왔다. 대표자들이 전날 새벽 (예) 인권활동가들이 한겨울 노상 단식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진지하게 설명하기 위해 긴급히 김 대표 면담신청을 한 터였다. 이날 오전 민주당에 동행했던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은 "민주당이 단식농성단의 절박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촛불집회에서 보고했다.

대표자들이 돌아온 지 6시간만에 박래군 농성단 상황실장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고통을 느낀 끝에 쓰러져 사당위원으로 이송됐다. 유가협 회원 오영자(60, 박선영 열사 어머니) 씨는 혈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져 농성단원들이 단식을 그만둘 것을 간곡히 호소했으나 거부한 채 링겔을 꽂고 누워있다.

5일 저녁 8시 촛불집회에는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연련 성유보 이사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또 참여연대 김태식, 안진걸 씨도 전날 차병직 협동투쟁에 이어 단식에 동참했다. 또 시민 김종현(26) 씨가 찾아와 단식농성에 참가해 5일 저녁 단식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각 단체의 지지성명도 이어졌다. 4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직원연합, 한국청년

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등이, 5일에는 제주인권지기를 비롯한 15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충북연대,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2면에서 계속)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명동성당 들머리를 열흘째 지키고 있다. 한겨울의 노상 단식농성, 비오는 밤도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논쟁과 핑계와 태만으로 3년을 허비한 정부는 결국 작년 12월, "연내 개혁입법 처리가 어렵다"며 뒤로 나자빠졌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 28일 흑한기 노상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기구 설치라는 인권 2대 현안 해결이 무산될 위기를 '몸'으로 막아서고자 한 것이다. 연말연시에 뭘 어찌할 수 있겠느냐나 해박야 안될 거라는 회의적 반응을 물렸던 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투쟁으로 '불길'을 돌릴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인권활동가의 양심에서 우려나오는 명령에 따라 '몸뚱이'를 던져 체념과 냉소에 맞서고자 했다. 이들의 무모함이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일 매시간 농성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며 꺼진 듯 했던 인권관련 법안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30일에는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이 농성단을 방문했다가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났다.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역시 지난 3일 문전박대를 받았다. 흑자는 이 일로 농성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대화와 협상의 대상자를 그리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운동가들이 언제부터 정치권과 그리 가까웠는가를 돌아보자. 우리가 몇 몇 정치인과의 안면과 옛 동료에 대한 정을 운운하며 그들과 당연히 두어야 할 거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 위원장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조직내의 한 점에 불과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손을 잡는다면 오늘 명동성당 들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릴 것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그 누구의 사정이 아니라 냉정한 거리두기를 통한 우리 자신의 철저함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활동가들은 지금 명동성당으로 가자. 가서 온 몸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넘어 민중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들에게서 생명력을 받아 안자. 추위로 얼어붙은 검은 얼굴을 보자. 그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느끼자. "온 몸을 던져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자던 초심을 되찾자. 지금 정세가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명동성당에 가서 지질 줄 모르고 싸우는 저들을 돌아보자. 뜨거운 손을 내밀어 어깨를 걸자.

이랜드 노동자 노숙철야농성 준비 6일로 파업 205일, 비정규직 연대 강조

6일로 파업 205일 제를 맞는 이랜드 노동조합이 새해 들어 노숙철야농성을 준비하는 등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안산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산아울렛 앞에서 5일 오후 3시 열린 이랜드 새해 첫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배재석 이랜드 노조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며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열린 4차 상경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는가하면 6일에는 데이콤노조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9일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10일에는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연맹의 지원 아래 '박성수 회장 구속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차 투쟁 결의 대회'를 마친 후 전 조합원이 노숙 철야 농성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 (심보선)

(▶ 1면에서 이어짐) 한편 단식농성의 취지를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방문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이 이뤄지고 있다. 6일 저녁 8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박준, 조국과 청춘, 손병휘, 우리나라, 최도은, 꽃다지 등이 긴급히 일정을 조정하고 무료로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7일 오후 2시에서 서울역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의 날' 집회를 한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개 종단이 역시 단식농성장에서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를 위한 시민·종교인 기원대회'가 열린다. 9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심보선)

■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촛불음악회

- 일시 : 1월 6일 오후 8시
- 장소 :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장
- 출연 : 박준, 조국과 청춘, 손병휘, 우리나라, 최도은, 꽃다지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 일시 :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본부에서 화요일 아침 10시 명동성당 회견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근로자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대표적 특수 고용노동자,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 지위 인정이 있었다. 지난 12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성 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 소재, 아래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건에 대해 "캐디(골프 경기보조원)는 캐디 요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도급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사측은 "부당 해고시킨 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성 C.C 경기보조원들은 작년 6월 노동조합(위원장 임재균, 아래 한성 노조)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단체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유보했다. 그러던 중 사측은 8월에 들어와 경기보조원 208명을 일괄 해고했다.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외에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는 일방적 해고였다. 한성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8월부터 지금까지 회사 앞 공터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후에도 한성 C.C측은 5일까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성 C.C 노조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6일부터 출근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관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철) 정은희 총무부장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안 났지만 이번 판정만으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들에겐 청신호"라며 "앞으로 이런 노동자들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크라운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한 경기보조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형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를 지방, 중앙 노동위가 '판정'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된다.

엄연한 노동자인데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운동본부는 추산하고 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9일(화)

제 17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30개 단체와 개인 등 110명이 참가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새로운 싸움을 위해 애초 일정대로 9일 단식을 중단한다.

8일 저녁 7시 50분 명동성당 들머리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화마당'에서 이와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단식농성단은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는 입장을 발표한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9일 회견에서 3대 개혁입법을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한다.

싸움의 첫발을 담은 '문화화마당'

8일 일반시민, 학생, 사회단체 회원 등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소속 민중가수들이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참가한 '문화화마당'은 '다시 싸움의 첫발을 내딛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단식농성단의 일원인 유해정 씨는 "저질한 단식농성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해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2월을 넘겨서는 안 될 문제들이 사그라들어 또 누군가가 꺼져가는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힘겹게 타오를까봐 이 농성을 계속 부여잡고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꽃을 일으켜 몸을 태우자"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세길 사무총장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3월까지밖에 없다"며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호소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대위 곽도현 상임집행위원장은 "99년

단식농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농성은 그 실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권진권 운동본부장은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법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인들, 정신차려야

이날 저녁 7시 경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6-7명이 농성장을 찾아왔으나 "당론을 통일해서 오라"는 농성단의 소금세례를 받고 돌아갔다. 또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의 만나도록 해주겠다던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종교인들, 개혁입법 실천 촉구

이에 앞서 8일 오후 2시 단식농성장에서 종교인들도 '3대 개혁입법 제정 및 폐지 시민·종교인 기원대회'를 열었다. 기독교 26명, 불교 32명, 원불교 24명, 천주교 신부 및 수녀 60명 등 142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이 겨울에 이토록 처절한 극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진지리치는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대 개혁입법을 실현하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단식농성 지지성명을 발표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8일 대부분이 언론이 단식농성단을 외면하는 것을 비판한 성명을 다시 발표했다.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과 이를 외면하는 야당"과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소극적인 정치권에 눈을 돌려 그 행태를 비판하라"고 촉구했다.

30개 단체 110명이 참가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은 7일 쏟아진 폭설을 딛고 노상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등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연말연시 유례없이 혹독한 추위에도, 탈진한 사람들이 속출해도 '몸뚱이를 내던진' 노상연좌 모습은 농성단을 지지하기 위해 단 하루라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운동 세력 움직여

단식농성단이 정치권까지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부패방지법 등을 포함한 3대 개혁입법 운동에 나서도록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1개 국내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혹은 두 차례에 걸쳐 25회의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또 시민사회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자신들이 항의를 전달한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등을 묻거나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는 전화나 이메일이 꾸준히 오기도 했다.

이처럼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열기도 불구하고 정치일정상 실제로 3대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은 3월까지로 보인다.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대중 정부에게 '일정한 기대'를 거는 것이 물거품으로 드러난 이상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총공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심보선)

● **마중강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소?

80년 5월, 나는 수배된 학생이었다. 부천 원미동의 가게에 취업해서 두 달 동안 석유배달을 하다가 잡혔다. 양귀자가 쓴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무대가 된 바로 그 동네, 13평형 5층 주공아파트단지 건너편 석유가게에서 내가 두 달 동안 있었다. 내가 그렇게 숨어서 배달을 다니던 그때에... 골목에서 중국음식점 철가방 소년을 만나면 즐거운 수다를 하기도 했던 그때에... 한가할 때면 석유가게 옆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살것 읽기도 했던 바로 그때에... 나의 친구 김의기는 종로5가 기독교방송국의 8층 난간에서 아스팔트 위로 투신했다. 그가 뿌린 몇 장 안 되는 유인물의 제목은 간단했다.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광주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죽고 있는데, 동포라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총칼을 군인들이 다시 국민의 가슴팍에 들이대고 있는데, 동포라는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김의기의 장례식을 치렀던 선배가 몇 개월 후에 나를 만나서 말했다.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다 숨어버리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끼리 남아서 김의기 장례를 치렀다. 애새끼들이라고 얼마나 똑똑 숨어버렸는지, 김의기 관을 운구할 놈들이 없는 거야. 너는 임마 나쁜 놈이야."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것이 80년대 10년 동안 나의 가슴에 살아있던 화두였다. 나의 친구 김의기가 기독교방송국 8층 난간에서 아스팔트 도로 위로 몸을 날리는 동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부채감이 80년대 10년 동안 나를 가위눌리게 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채감이 나를 가위눌리게 한다.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 그 혹한의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명동성당 길가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하얗게 얼음이 붙는 비닐을 덮고 길가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의 손발과 코끝이 동상으로 문드러지는 동안, 허기에 지친 사람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부채감으로 가위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명동성당 들머리에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가지 못했다. 천만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작은 변변거리라도 있다. 파업투쟁 2백일을 넘긴 이랜드 노동자들을 만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함께 울었... 당신들처럼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진한 발코랑내에 내 몸을 묻었... 그렇지만 그 알량한 핏계가 나를 해방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길가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모두 그 부채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자.

주간인권호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1. 그러니 우리는 결연히 싸울 수밖에

◎ 민주당 신임 정책위장, 구가보안법은 2월에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 김대중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요구를 A4용지에 정리해 내놓자 목록부담/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선언, 민주당 방문한 인권활동가 농성단원을 경찰 6명이 때매서 경비실 밖으로 내팽개침 (12/29)

2. 해외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긴 해야 하는데...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조약에 서명, 그러나 공화당과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은 미지수. 국제형사재판소는 6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하며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고 27개국이 비준했음 (12/31)

3. '나는 오늘도 내일도 '국보' 잡으러 다닌다'

◎ 2001년 첫날부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다. 경찰은 1일 0시 40분경 서울 종로에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의 '송구연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2000년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22, 반도제4)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아 국보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1/1)

4. 음, '필수공익사업장'은 속보여서 안되겠고...

◎ 국민·주택은행 파업농성을 주도한 금융산업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 외 5인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 (1/2)

5. 비정규직 딱지만 붙으면 그렇게 만만하나?

◎ 1월 2일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구조조정 저지! 해고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분당 본사 앞으로 집결 노숙투쟁 전개,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 뜨거운 연대를 표시 (1/2) / 파업 202일째 이랜드 노조, 안산아울렛 앞에서 새해 첫 집회 (1/2)

6.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추위와 폭설에도 단식농성 진행, 13일간의 농성 중단하고 새로운 싸움준비

◎ 30개 단체와 개인 110명이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참가. 명동성당 들머리 노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13일째 단식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부패방지법 시민연대 등 2,3월 앞두고 대규모 공동투쟁 모색 중 (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0일(수)

제 17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해오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여 정치권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질박함을 전달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3대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거부하거나 주저할 경우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권활동가 국회진입 기습 시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가운데 13일간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인권활동가들은 '근조국회' 피켓을 높이 들고 정치권이 '누가 더 더럽다고 서로 욕만하지 말고' 민중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19명은 9일 오전 11시 45분 경 삼삼오오 국회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앞 분수대로 집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인권활동가들은 "정치권이 온갖 개혁입법을 방치한 채 소모적인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 30여 분간 시위를 벌였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운동복과 맨발차림으로 달려나와 시위를 저지하며 몸싸움이 일기도 하였으나 인권활동가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활동가들은 약천후 속 장기간 노상 단식으로 온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 설치, 부패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

으로 보여주었다. 의사당 앞 시위를 마친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국회의원회관 앞을 지나 국회 정문까지 행진하며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는 자폭하라"는 등의 구호까지 외쳤다.

또한,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김석한 씨의 안경이 부서지기도 하였으며, 농성단 최재훈 상황실장과 박선영 열사의 모친인 오영자 유가협 회원이 급격한 피로로 쓰러져 강남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치료 후 별다른 탈없이 농성단에 합류했다.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계단에서는 '3대 개혁입법 회기 내 미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법시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민간단체공동대체위' 소속 단체 대표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민심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다"며 "오늘 개혁의 임무를 받기하는 자에게 내일 하늘이 그 기회를 다시 주지는 않는다"고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수차례의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민주당이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개혁입법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단식농성단 정리성명

단식농성단은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중에 발표한 성명에서 "개혁에 대한 염원과 뜨거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또 "농성기간 중에 그랬듯이 땀과 얼어붙은 얼음을 끼는 결연한 아침을 계속 맞을 것"이라며 "3대 개혁입법의 제정 및 폐지에 대해 어느 하나로 생색내려는 시도는 다른 사안을 사장시켜 결국 더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민주당은 명심할 것"을 촉구했다.

농성단은 이어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정치인들이) 처박고 있는 거짓과 태만과 배반은 내장속에서 썩어가 결국 국민들의 수술집도를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심보선)

단식농성에 참가한 한희숙 씨 인터뷰 “끝까지 투쟁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단식농성단에는 특히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있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원인 한희숙(47) 씨가 그 사람. 단식농성 마지막 날, 농성단이 해산한 직후 그를 만났다.

□ 어떻게 이번 단식농성에 참여하게 됐는가?
신문을 통해서 인권활동가들이 지난해 말 28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노상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노상에서의 단식농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누구나 농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즐겁게 단식농성에 참여했어요.

□ 단식농성에 동점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난 집에서는 한끼도 굶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을 단식하면서 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더 이상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두가지 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라는 목적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에 허기(배고픔)도 덜했던 것 같아요.

□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비와 눈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농성에 참여하기 시작한 날이 1월 1일인데, 이 날은 눈이 내리고 무척 추운 날이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웃으며 침구를 챙겨왔는데도, 춥더라고요.
한데, 추위는 나중에 웃을 더 준비해서 견뎌냈어요. 또 지지방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집회에 참여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갔어요. 벌써 9일이 됐잖아요.
북한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며칠동안 여기 명동성당 노상에서 잠을 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난 그리 힘들지 않은 셈이에요.

단식 농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말고도 주위에서 도와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기억에 남네요.
□ 이번 단식농성에서 느낀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기구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인권단체의 싸움으로만 머물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로 확대된 것 같아요. 단식농성이 시민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종교인들이며 일반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로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과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을 이번 단식농성 속에서 봤습니다. (고근예)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지난 해 여성노동자 성희롱, 경찰의 폭력적 농성 진압으로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었던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가 협상 타결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사 관행으로 노조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영)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이 임금·단체 협약(아래 임단협)을 무시하고 3급 이상 사원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7월에는 이들에게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까지 작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노조 이남경 사무국장(31)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인 3급 이상 사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미 지난 10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격주 휴무제를 악용하여 3급 이상 직원들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처리한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호텔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단협 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경영진이 1월중에 있을 임원 정기 인사와 관련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노사 분규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회사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호텔 롯데는 지난 8월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합동장 가임류 취소 △사측에서 파업 중 구속자 탄원서 제출 등도 합의했으나, 이 중 이행된 것은 없다. 이에 호텔롯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심태섭)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배급

유니세프 제작/ 가격 20,000(우편료 별도)

많은 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중단됐던 인권 비디오 <희망>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옵니다. 입학전 아이들은 물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권교육 교재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희망>은 98년 공표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단편애니메이션입니다. 4-10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 없이 그림과 음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보시기에 더 없이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문의: 02-741-5363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1일(목)

제 17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이랜드노조, 단식투쟁 시작 중계아울렛 앞,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200여 일 간의 파업, 그 끝은 있을 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진행해온 기나긴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 이랜드 노동자들은 단식투쟁을 선택했다.

이랜드 노동조합의 김양수 조직실장, 정선화 씨, 한정철 씨(비정규직 부곡분회)는 10일부터 서울 중계동 아울렛 매장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양수 조직실장은 “200여일 넘게 계속해 온 파업,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이라며 단식투쟁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인권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비인간적 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당한 채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은 교섭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용

역강패들을 동원해 가족들에게까지 언어 폭력을 가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해냈다.

박성수는 ‘자유’, 노동자는 구속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도피로 인해 여전히 구속이 집행되지 않은 반면, 조합원은 10명 구속되고 18명이 수배 중이며 60여 명이 해고되었다. 지난 9일 재판에서는 이상현 부곡분회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강진관 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 협의회 조직부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식투쟁에 앞서 오후 2시, 중계 아울렛 매장 앞에서는 ‘박성수 구속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차 결의 대회’

● 정보샘 ●

- ◎ 한국통신 계약직·이랜드노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문화제
 - 1월 11일(목) 오후 5시 / ·곳 : 한국통신 본사 앞(성남 분당 정자동)
 - 출연 : 최광기(사회),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꽃다지, 우리나라, 박준, 박은영, 류금신, 서기상, 윤미진, 기만서, 연영석
 - 문의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02-2236-3800)
- ◎ 한국전력 노동자 김시자 열사 추모사업회 1차 총회 및 추모식
 - 1월 13일(토) 오후 7시 ·곳: 서울 쌍문동 한일병원 강당
 - 1월 14일(일) 오전 11시 ·곳: 마석 모란공원(제5주기 추모제)
 - 주관 : 김시자 열사 추모사업회
- ◎ 박종철 열사 제14주기 추모제
 - 1월 14일(일) 오후 2시 ·곳: 마석 모란공원
 - 주관 :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
- ◎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곳: 경희대 복지회관 식당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929-1663)

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화학섬유연맹,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데이콤 노조,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 파견철폐공대위,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부곡분회 구재수 분회장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문제는 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그리고 파업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들의 열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집회 후, 단식농성을 하지 않는 이랜드 노조원들은 매장 앞 계단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파업 210일 째, 비정규직 화두로

11일로 파업 210일 째를 맞는 이랜드 노조는 ‘부당징계 및 해고 철회’, ‘비정규직의 임금을 현행 50만 6천원에서 72만 6천원으로 인상’,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 ‘계약직 노동자의 2년 후 정규직화’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노조는 기존의 요구안 중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파업기간 중 50%임금 지급’으로 바꾸고 노조전 임자와 관련해서는 ‘전임자의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남신 노조 사무국장은 “양보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구속을 불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 성희롱특별위(위원장 박명숙)와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대위 등은 11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노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의 ‘성희롱관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성특위는 지난 12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랜드 노동자 25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회사 측에 사과문 발송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박명선)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건수가 많아져 검색대상이 많아지면 성공사례가 많아지게 된다"며 2000년 12월 미아를 찾은 사례 두 건을 소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정보를 확인하는 동의를 후견인한테 구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는 10일 성명에서 "체계적인 개인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전자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규모 유전자 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 따른 개인 유전정보 유출우려를 미아찾기라는 인도주의적 외피를 내세워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협력기관으로 알려진 바이오벤처가 사업에 참가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상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아나 이산가족 찾기에 사회적 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조력 방안으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의 DNA를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 혹은 기업이 구축, 운영하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업은 이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후견인들의 동의를 구해 아동복지시설 미아들의 유전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또 보건복지부가 유전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담긴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실사 이 사업을 추

진 하더라도 위 법안의 제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인간유전자정보 보호법을 시급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보건복지부 발표한 것 말고도 계획중이거나 이미 시도되고 있는 인간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계획, △국립보건원의 유전질환 데이터베이스, △적십자 중앙혈액원이나 일부병원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혈액 확보, △신원 확인 및 각종 검사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벤처기업 등을 들고, "인간유전정보 보호의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심보선)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지난해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선고공판이 1월 16일로 연기돼 다시 열립니다.

현재 서 대표는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및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이 깊어 가는 이때 인권운동가가 어이없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현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은 서 대표가 12박 13일간의 인권활동가 노상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입니다. 보안관찰법은 바로 이런 활동을 문제시하는 법입니다. 서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성명 보낼 곳
- 1.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앞
팩스: 02-770-0253
-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길기봉 부장판사 앞
팩스: 02-596-9067
- *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팩스: 02-741-5364/humanrights@sarangbang.or.kr)
- * 성명을 발송한 후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도 1부 보내 주십시오.
· 전화: 02-741-5363/humanrights@sarangbang.or.kr (류은숙 사무국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2일(금)

제 17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초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

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랜드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노조 측이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해왔다. 심지어 진상조사를 하던 민간단체 대표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특별위는 지난해 5월 17일-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1백82

명이 참가한 '판매여직원 전방체험 학습교육'에서 '말뚝박기'놀이, 틀린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벗는 '3·6·9 게임'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여직원 1백25명이 "성적모욕감이 전혀 없었다"고 연대서명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군부대에서 '여직원 중 평균 2-3명 정도는 소극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일부 여직원도 "군중장교 등이 '사병들에게 잘해줘라, 섞여 앉아라, 땀을 짜서 먹여줘라' 등의 말에 짊어진 여직원들은 다소 불편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군중장교와 관리자들의 발언 등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상황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여성특별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회사는) 군부대 서비스교육 자체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사과문 발송, 회사 게시판에 광고, 회사 홍보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특별위는 또 지난 1월 8일 통지한 의결서에서 "우선 군부대 서비스교육 자체만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며, "기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건은 추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혀 '군부대 서비스 교육'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할지 주목된다.

시정권고를 받은 피신청인(회사)이 30일 이내에 여성특별위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조사를 신청한 이랜드 여성노동자는 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심보선)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은 11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종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어,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골자로 지난해 의원 95명이 제출한 입법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반부패기본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2면으로 이어짐**

만화사랑방

이동수



새로나온 책

『깨어나, 일어나 :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국제평화의어린이회 지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옮김, 사람생각 펴냄, 2000.

"낙태를 하고 말고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 - 나탈리아 라미네즈 (12세, 아르헨티나)

아이들은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자신의 눈과 언어로 인권에 대해 쓰고 그린다면 어떤 창조물이 나오게 될까? 이 물음에 답하는 책이 바로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원제: Stand Up for Your Rights)다.

『깨어나, 일어나』는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우간다, 파키스탄, 코소보 등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시와 그림, 편지, 일기,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아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30개 조항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시각에 비추어 독창적으로 해설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우리가 받들고 선 현실 속으로 깊숙이 침투시킨다. 이 책이 선사하는 가장 큰 즐거움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럴 듯해 보이는 선언문만 만들어내는 일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실제로 뭔가 일을 해야만 해요." 14살의 안드레스(니카라과)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포착해내는 동시에 인권의 존중과 향상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직접 쓰고 그린 만큼 『깨어나, 일어나』는 그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인권의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옮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은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안내해줄 수 있는 책에 꼭 말라 있던 인권활동가와 교사, 학부모들에게 이 책이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배경내]

● 구입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1면에서 이어짐 '3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침칭하거나'라는 문구의 삭제 △제10조 불고지죄 폐지 △제19조 구속기간 연장의 삭제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지 및 제21조 상급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제7조와 관련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정도의 수정안을 건의했다.

한편, 의원모임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창조)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김석한(울산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인권활동가들의 13일간의 노상 단식농성이 국회의사당 앞 기습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농성단원들조차도 이 투쟁의 파급력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농성을 시작했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되고 함께 하면서 1월 9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요구와는 달리 3대 개혁입법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진 않았다. 그러나 노상에서 굶어가며 진행한 우리의 투쟁은 냉소와 무관심 속에 묻혀 있던 인권단체들의 의지를 정치권에게 확연히 심어 주었다.

그래도 인권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인권 회복을 위해 노상 단식농성을 하고 국회의사당에서 기습시위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나 보다. 그저 면피를 위해 농성장을 찾아오는 몇몇 의원들만이 우리들의 소금과 눈을 맞고 돌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울산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최병국 의원(울산남)의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 우리를 맞아 준 것은 최병국 의원이나 그의 보좌관이 아니라 무장한 전투경찰이었을 정도로 정치인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무했다.

그간 인권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비롯한 3대 개혁입법 투쟁은 거대담론에 파묻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머리 안에서만 맴도는 투쟁뿐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들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메아리 없이 퍼지는 구호 속에서만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단일함도 일조했다. 누군가, 언젠가 하겠지 하는 단일함.

그렇기에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노상 단식투쟁은 우리의 단일함을, 그 부끄러움을 일소해보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지역에서 3대 개혁입법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울산으로 내려올 때 버스 창 밖으로는 서울에서 추풍령까지 하얀 눈들의 띠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7일과 9일, 농성단을 힘들게 했던 그 눈이 그때는 그렇게 소담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 눈 속에서 함께 뒹굴며 투쟁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났다. 농성장의 만행 서준식 대표님, 국회의사당 시위 때 경찰을 호통치시던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링거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노상 단식농성을 함께 한 활동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성을 마치고선 조금은 아쉬워하던 동료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얼음을 깨는 결연한 아침'을 그들과 함께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의지마저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정장선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2월에 결정된 일"이라며 "허가제 시행 원칙엔 당정이 합의하고 있으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산업연수생제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연내에 고용허가제 법률안을 통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도 벗어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정 합의 사항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제도 시행은 유보된 것이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의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임금 노동을 강제할 뿐 아니라 노동 3권 등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연수생들은 작업장을 스스로 이탈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가 일수다.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7월

현재, 26만여 명의 전체 이주노동자 중 17만 여 명에 이르고 있어 합법체류자의 수가 40%도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연수생의 근로자성까지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늘고 있어 연수생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다.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인권단체 활동가 노상단식농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한겨울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그들은 무려 일곱달째 파업을 벌여온 이랜드 노동자들이다.

바람도 통하지 않는 물류창고에서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고작 50만원에 불과했고, 언제 썰려나갈 지 모를 하루살이 비정규직 인생이 전 직원의 절반에 달했다. "임금을 70만원대로 올려달라! 일정 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그들의 소박한 요구였다. 이미 IMF 시기를 고비로 절반의 직원들이 썰려나갔고, 3년 이상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고통을 감내했던 노동자들이다. 반면 회사측은 99년 한해에만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빈자리에 대체노동자를 불법 투입하는가 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해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적반하장 자세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결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왜 사태는 계속 이 지경인가?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줄줄이 철창에 쳐박히는 반면, 박성수 회장의 해외유람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이 전도된 상황을 당국은 무슨 변명으로 무마할 것인가?

결국 노동자들만 하나둘 지쳐가고 있다. 그것이 박성수 회장의 노림수라면, 그것을 착각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외피로 착취자의 모습을 가려 온 박성수 회장에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원칙을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강력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랜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길바닥에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이 즐겁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1년 1월 13일(토)

제 17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한편, 고용허가제 유보방침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는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불합리한 정책과 그릇된 경제 논리로 반인권·반개혁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이윤주 집행국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회와 같이 연수제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이권집단에 민주당이 휘둘렸다"며 "3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자 지위와 권리 획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태섭]

<인터뷰> 구강희(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31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명문]

◇ 농성에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노조원 1천5백명 가운데 5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 작년 말 실시된 구조조정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8월말 1천명이 해고됐고 12월말 6천여 명이 해고됐다. 이번 대규모 정리해고는 사측이 도급화와 외주화 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가설공의 경우 지난 96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급 인력을 계약직으로 흡수한 일도 있었다. 무조건적인 도급화와 외주가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구조조정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는 구조조정 방침의 전면 철회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해고 철회 △재계약 후 2001년 성실한 임·단협 시행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없앨 것 △파업기간 중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 것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것 등이다.

◇ 조합원 일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무엇인가?
1차로 4백25명이 제출한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갱신해서 근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고한 것이다. 웬만한 계약직 노동자는 자기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을 정도로 자동 갱신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중순 대구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해고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농성에 대한 지지와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학생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파견철폐공대위 등 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우리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고마울 뿐이다.

◇ 승리의 확신은 있는가?
낙관한다. 우리는 일하면서 우리의 도장을 사무실에 맡겨 놓고 일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권도 지키지 못하면서 일한 것은 정규직화라는 꿈이 있었기에 감수했던 것이다. 비정규직을 제 때대로 고용하면서 부러먹고, 달변 삼키고 쓰면 뱉는 자본에 맞서는 싸움이다. 타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하며,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슈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20일 공화당 부시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취임식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연대체, '정의를 위한 행동'(the Justice Action Movement)은 부시 행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반대하는 네트워크로 사회적 정의라는 대의 아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을 '여성, 공교육, 소수자, 환경, 동성애, 공중보건'에 반하고 '투옥, 사형, 자본'에 친화적이라고 집약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미국의 사회운동단체인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는 '부시의 취임에 반대해야 하는 13가지 이유'라는 성명에서 부시가 표방하는 '온정적 보수주의'의 온정은 자본을 위한 온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화당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에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민중의 거대한 움직임만이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제행동센터가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전수는 52개주 중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사형제도는 인종차별적이고 빈곤층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3.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의 법률고문 애쉬크로프트는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의 낙태도 반대하고 있다.

4. 부시가 국가전방위체제(NMD) 구축에 쓰려고 하는 군사예산은 사회복지정책에 쓰여져야 한다.

5. 동성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6. 부시가 주지사로서 있었던 텍사스의 환경친화도는 미국 주 가운데서 50위를 기록했다. 부시와 내무장관 후보자 노튼은 이미 북극극지방야생동물보호지역의 석유 시추를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 부시행정부는 천자본 반노동적이다.

이 외에도 국제정책에 있어서 부시의 패권적 정책을 비난하며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 쿠바와의 적대관계 청산, 이스라엘 지원 중단, 남미 내정 간섭 종료, 푸에르토리코의 비에게스 해군기지 철수 등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위와 워크숍이 진행 중이며 특히 20일 취임식에서는 모든 단체들이 결집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이번 시위가 1973년 닉슨 취임식 때의 베트남 반전시위 이후 최대규모의 취임 반대시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6일(화)

제 17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정부업무보고 평가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히자, 극우언론 조선일보가 또 편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었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법적 실효성보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상징성이 더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실효성도 없는 법을 '상징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억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일보 스스로 '국가안보의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유지하려는 뉘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미를 웅변해준다"는 비약에 이르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의 무슨 단체들이 '나라의 안보'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다. 더불어 독일이 "우리보다 엄격한 체재보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형

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험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조선일보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가혹한 북한형법의 존재에 대한 상응적 조치 없이 무조건적 상호주의의 포기는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조선일보의 억지와 왜곡은 점점가경이다. [심보선]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기명문]

● 정보샘 ●

■ 서준식 대표 선고 공판(국가보안법, 집시법, 보안관찰법 등)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 서준식 대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
-16일(화) 오후 1시30분, 대법원 특별1부 1호 법정

■ 양지마을 강제 수용자 민사소송 선고 공판
-16일(화) 오전 11시30분 서울지법 559호

■ 이랜드 노동조합 파업 관련(업무방해 등)
채운기 수석부위원장 구재수 부곡분회장
-16일(화) 오전 10시, 서부지방법원 407호, 속행

■ 민족민주혁명당 사건(박종식, 박정훈, 최진수, 한용진, 이의엽)
-19일(금)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속행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한다는 일상적 논리를 앞세운 때 서운 한파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면 햇빛고 굶주린 민중의 삶은 더더욱 고달파진다. 부패한 위정자들과 자본권력의 위세 앞에 움츠리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간다.

동해 바다의 세찬 바람에도 울산 미포만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움직이고 석유화학공단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다. 첫 글인 만큼 제벌 현대그룹을 소재로 해야겠다. 현대왕국으로 불리는 울산을 소개하는데 제격이다.

작년 11월 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산대학교에서 5일간 울산인권운동연대 주관으로 인권영화제를 열었다. 학교측으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준비중이었는데 개막 이틀 남겨두고 이유도 없는 행사 불허 공문을 받았다. 결국 '공식 불허 비공식 허용'이라는 헤프닝 속에 영화제를 치렀다. 그 내막을 보면 현대그룹이 막강 파워와 치졸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울산대학교의 재단은 현대 정몽준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다. 외부에서 걸려왔다는 전화 한 통 후에 총장이 결재까지 한 외부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말에 한참이나 할 말을 잊었다. 재단사무국인지 위원사무국인지 현대중공업인지 학교관계자들조차 엇갈리는 대답으로 봐서 이 모든 기관이 울산대학교 행정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울산과대학도 또한 같은 재단 소속이므로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울산의 대형 백화점 세 곳 모두 현대백화점이고 이외의 백화점들은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았다. 제벌 소유가 금지된 지역민방인 UBC 울산방송마저 백화점을 인수하며 슬며시 계열화시켜 버렸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미포조선 등이 있는 울산 동구는 그야말로 현대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울산대학병원, 호텔, 문화회관, 백화점, 복지관 등등 사회 주요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현대 제벌이 사회환원인양 우기지만 그 구조나 역할을 보면 교묘하게 지역사회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기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현대제벌 자본의 울산 동구 장악 음모는 구청과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로 동구청장에 이영순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불법 노상 점거라며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다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며 거절당하는 등 지역 장악력이 약화되자 노동계 출신 구청장을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 최민식 씨는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1. 사과 없이 "유감"으로 땀땀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통해 미국의 노근리 학살행위 공식 인정. 그러나 발표 책임자 안 밝히고, 미국은 피해자 보상과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노근리 대책위, "실체규명 미흡하고 사과 없다"며 반발(1/12)

2. 성추행 사단장 징계위 회부
육군,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에 회부(1/8) 사단장은 회식 도중 여군장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9-10차례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나

3. '3대 개혁입법 촉구'
천주교·불교·개신교·원불교 소속 종교인 142명, 국보법 폐지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1/8)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명동성당에서 공동 기자회견 갖고 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1/9)

4.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이랜드 노동자들, 사태해결 촉구하며 중계동 아울렛 매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10)

5. '강한 정부'의 첫 사업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미국 대사관 구내시위 관련자 등 관공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사건의 적극 가담자 202명에 대해 일제 검거령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1/10)

7. 더 이상 말잔치는 필요없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1/11). 김 대통령, 2000년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 상관없이 국보법 이른 시일 개정' 방침 밝혀(1/13) 민주당 내 개혁입법 추진모임 소속 의원 18명,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김중권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전달(1/11)

8. 나라밖 과거청산 열기
철레 피노체트 군정시절, 반체제 인사 520여명이 바다에 수장되거나 산 속에 버려졌다는 충격적 보고서 공개돼(1/8) 유고 정부, 발칸 지역에서 민족 화해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종화해와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 방안 추진(1/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7일(수)

제 17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한국통신 노동자 한강대교 시위

"부당해고" 호소에 회사·언론 꿈쩍 안해

"총파업 35일째,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 노숙투쟁 15일째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회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우리 많이 지쳤고, 언론의 냉대가 너무 서럽다."

16일 오전 10시, "한국통신은 고용안정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서울 한강대교 위에서 나부꼈다. 한강대교 5m 남간 위에서 겨울 감바람 속에 위태롭게 현수막을 부여잡고 있는 이들은 계약직 노동자 7천명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이다. 이창기 씨 등 5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여 동안 기습적으로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 씨 등은 오전 11시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고공시위까지 감행한 것은 전날 동료 조합원이 반신마비로 쓰러진 사실에 큰 충격

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추위 농성에 동료 쓰러져

1월 2일부터 한국통신 본사(경기도 분당) 앞 농성투쟁에 참여해왔던 이동구(28·대전충남본부) 씨는 15일 정오 무렵 반신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쓰러져 분당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지나치게 피로가 축적된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워 왼쪽 뇌의 혈관이 응고된 나머지 혈액순환이 안 돼 마비증상이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루가 지난 16일 이 씨는 마비되었던 오른 팔과 다리의 감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는 언어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씨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이춘하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상임실장은 "이 씨 외에도 살인적인 추위에 몸이 아픈 조합원들이 많다. 동상에 걸린 사람은 태반이고 개별적

으로 병원에 입원한 여성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매항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매항리 미군폭격장 폐쇄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기소됐던 김용한(매항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씨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법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제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적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악귀처럼 관철시키려는 악습이 만연되고 희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계변을 늘어냈다. (이창조)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부장 박재유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이다. (기명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16일 열리기로 한 서준식 대표의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김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동성당 농성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을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기명문)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

여성특위, 한성컨트리클럽에 시정 권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 아래 여성특위)가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여성특위는 한성컨트리클럽(대표 강병준, 아래 한성C.C) 경기보조원들이 제기한 성희롱 피해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10일 한성C.C 노조(위원장 임재균, 아래 한성 노조)에 보내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성특위 전원 회의에서 이랜드 여직원 성희롱 인정 결정과 함께 내려진 것이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한성 노조 경기보조원은 모두 11명의 여성으로 한성C.C와 김종부(50, 한성C.C 소속 프로골퍼) 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성희롱 피해 구제 신청을 냈다.

여성특위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김종부는 경기보조원들을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신청인들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자신의 성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가하면 "해봤나, 내기해서 내가 이기면 한번 쥬라"는 등의 말까지 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성특위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한성C.C 측은 김 씨를 부서 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하고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여성특위는 또한 "피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함께 알려왔다.

한성 노조 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아쉽지만 사측이 계속 부인해온 성희롱의 실체를 드러낸 것만으로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여성특위의 권고 사항을 사측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C.C는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경기보조원들을 부당해고시켰다는 결정을 받고 이들 모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받기도 했다. 해고당한 경기보조원들은 '원직 복직,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한성C.C 옆 공터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측은 아직까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본지 1월 6일자 참조). (심대섭)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흥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노조설립에 대한 탄압에 못 견뎌 자해용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 폭력 혐의로 구속된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본지 2000년 12월 20일자).

박 씨의 혐의에 있어 쟁점은 과연 박 씨가 소지하고 다니

던 칼로 회사 간부 등을 협박했느냐 하는 점. 이날 재판에선 삼성SDI 제조팀장 권기창 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관련된 신문을 받았다. 권 씨는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 대해 "박 씨가 칼을 소지한 것은 못 봤지만, 가방 안에 칼이 들어 있다고 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또 "면담과정에서 박경열 씨는 동료 김용구 씨의 조속한 귀국 외엔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권 씨는 "삼성SDI의 노조설립 탄압"을 추궁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삼성SDI는 대통령이 주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회사"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음 재판에선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인물인 회사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이창조)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업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한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해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근로자 개념)가 결정"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 정양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역 혹은 산별 노조가 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업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산별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해 실업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1월 설립됐으며 이후 2000년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청이 반려되자, 지난해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설립신청을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8일(목)

제 17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자민련 · 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준치 입장 거듭 밝혀

김대중 대통령이 연일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자민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이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일부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도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피하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부 법조항의 「과잉」이 있지만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는 김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일부 운용이 있었으나 일반 시민에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개정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술 더 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보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좌우는 쟁을 촉발해 국론 분열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국보법 준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보법은 인권의 문제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16일 한국일보의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렬히 비판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형법 등과 결부시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추야 한다는 망발"이라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간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과 민주 발전을 위해서"라고 못 박았다. '일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

서도 노동당 규약 운운하며, 말로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또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말 것을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승만 정권이 '경범죄법'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비춰' 개정을 주장한다. 대통령의 개정론도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눈감고 '현실'만 언급하고 있다. 핵심조항인 제7조 완전 삭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수준의 개정"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보법 사범 중 제7조로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현 상황에서 생색내 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7조 삭제없는 개정은 생색내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촉구했다. 또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보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부는 또 대통령에게 "반 인권세력의 논리에 밀리지 않는 결연한 실천을 할 것"을 촉구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국보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심대섭)

● 정보샘 ●

- ◎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시면축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 1월 19일(금) 오전 10시 · 곳: 출입국관리소 앞(5호선 오목교역)
 - 주관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02-985-9061)
- ◎ 편파적 공권력 규탄 및 박성수 구속촉구 제1차 결의대회
 - 1월 19일(금) 낮 12시 · 곳: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 편파적 공권력 규탄 및 박성수 구속촉구 제2차 결의대회
 - 1월 20일(토) 오후 2시 · 곳: 청와대 앞(청운동 국민은행 앞)
 - 주관 : 이랜드노조 투쟁지원대책위원회(017-297-2767)
- ◎ 청주시역 제1차 실업자 대회
 - 1월 20일(토) 오전 10시 · 곳: 청주시청 옆 소공원
 - 주관 : 청주시역건설일용노동자/충북지역여성노조(043-258-2660)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적 조치 요구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철, 민주관광노련)과 호텔롯데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17일 정부에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관광노련은 성명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격리를 권고한 여성특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특위의 결정 이전에도 노동부는 호텔롯데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호텔롯데 성희롱 가해자들은 징계를 당하기는커녕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성 CC의 가해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을 탄압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가해자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관광노련은 이같은 현실이 "정부가 성희롱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구색맞추기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성희롱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호텔롯데 노조는 "주로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미정계는 한성 CC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한성 CC가 성희롱 문제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한성 CC 대표이사에게 가해자를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심보선]

비정규직과 연대를 외치는 그대가 있을 자리는?

2001년 1월 중계 아울렛 이랜드 단식농성장

이랜드 싸움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로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파업한지 216일, 김양수 조직실장 등 조합원 3명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뚫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 회사와 정부, 언론의 냉대 속에 이랜드 조합원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

중계 아울렛 앞은 '엽기', 그 자체다. 아울렛 정문 진입계단 바로 밑에는 성냥갑 모양 단식캠프, 캠프 뒤에는 투쟁가가 험 없이 흘러나오는 노조 방송용 차량. 정문과 단식캠프 사이 계단에는 일당 15만원을 받고 투입된 '가짜 입은 어께'들이 이열 황태로 줄지어 있고, '어께'들 오른쪽에는 노조 방송차량 대항용 스피커 소리에 맞춰 나레이터 모델 2명이 열심히 '가무'를 선보인다. 진입로 좌우로 길게 늘어선 12월 10일 중계 아울렛 점거 노조원 폭행사건 게시판,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 사이를 유유히 빠져 아울렛으로 들어가는 구매자들.

"문득문득 제 정신이라는 게 신기하다"며, 조합원 이은혜 씨는 허탈하게 웃는다. 파업 200일을 넘기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이씨. 그러나, "힘든 건 따로 있다." 친한 조합원에게 파업 중 임금을 보전 받지 못한 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데, 그가 "들어가서 잘 하겠다는데 왜 이 난리냐"고 역정을 냈다는 것. "박성수가 노리는 게 우리끼리 지치고 힘들어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는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온 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

3시 반을 넘겨 늦은 점심을 먹으러 까르푸 매장에 들어서자, 곱게 한복을 입은 여직원들이 눈에 띄었다. "구정이 다가와서 그런다"며 여성 조합원이 싱긋 웃는다. "이랜드 매장에서도 제일 싫은 게 대목마다 한복 입는 일"이라고. 그러자, 이은혜 씨가 "재는 팔뚝이 굵어서 물건 나르느라 한복 입을 일도 없었다"고 핀잔을 준다. 국사발을 꺼안다시피 밥을 먹던 여성 조합원은 팔을 들어 보이더니 "나 집안 내력"이라고 너스레를 떠다. 단식자들 두고 밥 넘어가느냐고 묻자, "단식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 아직까지는. 정작 문제는 집회에 참가하느라 지쳐 떨어져 집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란 다. 분당에서 중계로, 안산에서 부곡으로 하루에도 각 사업장을 다니며 파업투쟁에 참가하다 지친 탓이다. 아니 "미국 유럽하느라 바쁜 이랜드 박성수 회장 때문"이다.

다시 돌아온 농성장은 여전히 그대로. 밥 먹을 동안의 생기는 찾아볼 길 없다. 애써 웃음을 지어보지만, 이내 찾아오는 피곤함. 그나마 늦게라도 하나 둘 찾아오는 오는 이가 있어 서로 의지가 된다. 이은혜 씨는 "지금 간부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로 입밖에 내는 걸 두려워하지만 구정이 고비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수염이 덩수룩한 남성조합원은 "파업기간중이라도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그렇지만 당장 힘드니 들어가서 잘하면 된다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한다. 이은혜 씨는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정직하게 200일이 넘고 열심히 해도 안되니 그만 접자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우릴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할 땐,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서로 힘드니까 그러지요.' 수염 덩수룩한 조합원이 격해진 이씨를 달랜다. 서로가 숨이 가쁘다.

216일 하루하루가 이토록 숨이 찼는지... 그 많은 수사는 또 얼마나 낯선지... "이랜드 투쟁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200일 넘게 싸운 역사적 투쟁"이라 말하는 그대, 여기에 있어야하는 건 아닌지.

꾸역꾸역 넘어오는 질문만큼 암울한 여기는 2001년 1월 17일 중계 아울렛 이랜드 단식농성장.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19일(금)

제 17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설 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경찰이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1인 시위마저 가로막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오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홀로' 몸 벽보를 부착하고 서 있던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강제로 연행해 40여분 간 노상에서 '불법 감금'했다. 문정현 신부는 "노근리 사과, 소파 전면개정" 등이 적힌 '벽보'를 몸에 두른 채 이날 오전 10시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 침묵한 채 서 있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은 10여분 동안 상부와 연락을 취하다 10시 10분 경 전경을 동원해 문 신부를 방패로 겹겹이 에워싸 움푹달짝 못하게 했으며, 10여분 후인 10시 20분 문 신부를 '번쩍 들어' 교보문고 지하도로 옮긴 후 40여분 동안 불잡아왔다. 경찰은 오전 11시경에야 문 신부를 풀어줬다.

현행 법률은 주한 외국대사관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집시법 제11조)하고 있지만, 이날 문 신부의 행동은 집시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었다. 집시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시위의 개념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제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상속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국제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제청 건물 앞에서의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데서 비롯됐다.

중로경찰서 정보과 박 아무게 요원도 "집시법 상 집회를 못하게 돼 있는 곳이라든 1인이 몸 벽보 등을 부착한 채 침묵한다면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현장 상황을 모르지만) 만약에 경찰이 문 대표를 강제로 옮겼다면 집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소송을 통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집회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명절도 거리 감옥에서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정치수배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2백여일 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연말에 성당측에 의해 농성장을 철거당했던 진재영(30·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이동진(25·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씨는 18일 "2월말로 예정돼 있다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를 석방시키고 정치수배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싸울 수밖에 없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명절인 설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 수배자들의 처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농성자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의 감옥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수의를 입은 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을 벌이게 된다.

농성자들은 또 "현재 국보법 관련 정치수배자가 220명 있으며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 78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진재영 씨는 "정치수배자의 95% 이상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라며 "7조 완전 삭제를 제외한 개정 논의는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대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영하 17도의 혹한 속 노숙 농성...농성중인 노동자의 반신마비...그리고 한강철교 위의 외침. "한국통신은 고용안정 보장하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왜 이토록 힘든 싸움에 나선 것일까?

한국통신은 지난해 11월 말 1천명, 12월 말 6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교섭 기간 중 계약해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회사 쪽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었다.

12월 13일 계약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측은 서울 은평전화국, 양재전화국, 경북 구미전화국 등 각 전화국별로 계약직 노동자들이 맡았던 전화가설 등의 업무에 대체근로를 투입하거나 이를 도급으로 전환했다. 파업기간 중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게 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내인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팔아먹겠다는 속셈”

수천 명의 '목줄'을 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회사측 입장.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중요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업의 추세다. 한국통신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통신 기초실 관계자) "돈이 되지 않는 분야는 우선 도급화 혹은 분사화하고, 나머지 주력 분야만 남겨 알짜 기업으로 만든 후 사기업에 팔겠다는 속셈이다."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유승덕)

올 2월말까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교시'는 한국통신의 무지막지한 '인원감축'에 커다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국통신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가? 왜 굳이 한국통신을 사기업화하려 하는가? 노동자 유승덕 씨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겉치레일 뿐이다. 정부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을 확보하려는 게 큰 목적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송유나 씨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항인데, 한국통신에 눈독을 들이는 사기업들의 입려도 큰 것 같다"고 말한다. 해외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공공부문의 사기업화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한국통신, 나아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사기업과 국내외 금융자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포장일 뿐인 셈이다.

다음 차레는 정규직이다

지난 12월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제단의 희생물로 올려진 것이 계약직 노동자들이었다. 애초 정규직 노조 역시 '전화가설·고장접수 업무의 도급화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는 노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 슬며시 사라졌다. 그리고 전화가설, 고장접수 업무는 1월 1일자로 모두 도급으로 전환됐다. 정부의 인력감축 지시를 배경으로 한국통신의 계약직 노동자 7천명에 대한 해고가 마무리 된 것이다. "도급화가 되면서 업무가 사라졌으니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기초실 관계자는 말한다. 일자리가 없으니 떠나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계약직이 하던 일을 도급직으로 전환했을 뿐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좀 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고용관계가 기존의 고용관계를 대체하는 것뿐이다.

"계약해지 된 노동자는 도급회사에 가서 일 하면 고용이 보장된다"는 한국통신 기초실의 관계자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으로 도급업체는 일이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경남 김해의 한 전화국에서 일하던 구 아무개 씨는 도급으로 전환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도급업체로부터 12월 20일 이후에는 고용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도급으로 전환하면 1개월치 임금과 위로금을 더 주고,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일을 맡기겠다"던 애초 한국통신의 약속 역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지난 한해 동안 이미 1천2백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의 형식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그 다음 수순으로는 선로 유지 보수 업무, 114 전화국, 국제전화국, 영업분야 등의 분사화가 예고되고 있다. 분사화가 될 경우, 정규직 역시 일부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살아남은 노동자는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고용되는 처지가 된다.

구조조정의 수혜자는 누구?

한국통신 구조조정의 수혜자는 결국 누구인가? 인원감축과 매각을 통해 확보된 '선물'은 누구의 손으로 흘러들어 가는가?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된 투쟁의 전선에 나선 것이다. 한국통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정규직 노조마저 비정규직의 잘려나가는 수족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위로 돌아가는 순간, 그 다음 희생은 정규직을 겨누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20일(토)

제 17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

인하대 김영규 교수 징계위 회부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학내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현직 대학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은 이달 초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 김영규 교수(사회과학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해 교수 본분에 배치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했으며 △총장 및 재단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해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징계사유서에서 "김 교수가 각종 노동사회단체에 적극 참여"한 사실과 대우자동차 파업선동, 청년진보당 활동 동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김 교수가 지속적으로 재단비리와 총장 퇴진을 언급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인천지역의 각 사회단체들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으며, 교수사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는 18일 간담회를 통해 규탄성명 발표를 결의했으며, 2월 1일 창립 예정인 「전국대학교수회 준비위원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정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회장(외국어대 일본어과)은 "김영규 교수에 대한 징계는 김 교수 개인이 아닌, 교육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한 공격"이라며 "2002년 교수 연봉계약제의 전면 실시를 위한 전초이며 유사한 일이 여러 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교수의 정치운동은 기본권의 연장선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번 일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고 부정파괴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비판 자체를 봉

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규 교수는 인천지역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학내에서도 재단운영의 민주화를 적극 요구

해 왔다. 특히 재단측이 교수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총장후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임명한 노건일 총장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단의 비위를 거슬러 왔다. 노 씨는 6공에서 교통부장관을 지냈고 퇴임 후 인하재단의 모기업인 한진(주)의 이사와 고문을 맡아온 인물이다.

김영규 교수는 19일 "부당징계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조)

논평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전쟁 중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우발적 사건이지 미군 당국의 명령에 의해 저질러진 의도적인 학살은 아니다." 지난 12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요지다.

미군은 자신들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치밀하다는 근거로 "150여명을 면담하고 100만쪽 이상의 문서를 검토"했다고 하는 등 곳곳에서 숫자를 동원한다. 그러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가 될 24사단 7기병연대 문서다. 미군 당국은 다른 부대 문서는 그토록 잘 찾아냈으면서도 7연대 문서 중 핵심 기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도 배척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격하라"는 일반지침, 로저스 대령 메모 등 정황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이들을 싹 무시하고, 피해자와 미군 일부 병사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문서 증거주의'로 일관하던 보고서는 어느 순간 다른 얼굴로 바뀐다. 미군이 피난민을 학살한 동기가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병사들의 심리적 공포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변하기 위해 참전 병사 몇몇의 증언(!)을 동원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노근리 사건을 전쟁중 흔히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노근리의 민간인은 우연히 날아온 총탄에 재수 없이 실장을 관통 당한 게 아니다. 철로 위에서 공중 기총 공격을 당하고, 쫓겨 들어간 쌍굴 안에서 무려 4일간 무차별 사격을 당했다. 정규군이 무려 4일 동안 무차별 살상을 해놓고도 '우발적 행위'라 우길 수 있는 감심장이 부럽다.

우리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갔다. 한미우호관계라는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이제 참으라고 넌지시 권한다. "너만 조용하면 모두가 편하잖아"라고 다 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분명히 하자. 국익의 뿌리는 국민 개개인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한 채 존재하는 국익이란 다 거짓부렁이다. 정부는 허구의 국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의 정치적 거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무고하게 죽은 자가 있고, 가해자도 있다. 가해자는 진상규명의 투쟁을 '유감'으로 막았다고 자위하겠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투쟁은 결코 이대로 덮을 수 없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것 없이 진실이 봉합되는 일은 제2의 학살이요 범죄행위다.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근속년수 19년인 김 씨. 김 씨는 가설공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약직보다 약한 노동강도에 근속년수도 짧은 정규직이 연봉 2천5백만원(수당 포함)을 받아 가는 동안, 그가 받은 임금은 1천5백만원(수당 포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행여 불이익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불평도, 불만도 내보일 수 없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땀약발에도, 전신주와 맨홀을 오고가는 그의 노동은 계속되었다.

정규직 소망 하나로 버텼지만

하지만 조금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되리라는 작은 소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IMF위기가 닥치자 회사측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했다. 두 부모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김 씨에겐 날벼락이었지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인내 하자'며, 더욱 혹독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기간동안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김 씨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을 정도다.

99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규직들의 임금은 원상회복됐지만 오히려 김 씨의 월급은 85만9천원으로 다시 삭감되었다. 수당도 사라졌고 회사에는 분사와 도급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어쩌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김 씨가 노조를 결성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조직하게 된 이유였다.

드디어 지난해 1월 서울 소재 4개 지국의 계약직 대표자들이 모임을 갖

고 노조 추진을 결의했다.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해도 너무 한다. 너무 당하고만 있었다"며 회사측을 성토했다.

2월 들어 김 씨와 동료들은 계약직 협의회를 발족했고, 3월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총파업 시도는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다. 회사측에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너희들은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 사이 5월 말 충남본부의 계약직원들이 해고되었고 비공개로 입수한 회사측 문서에서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도 해고대상임이 드러났다.

전국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에 가입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통신의 노조 규약이 비정규직도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묶여 계약직 노동자만의 별도 노조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힘겹게 결성한 합법노조

의외로 노조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임금과 고용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는 "7천여 명이 해고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노조원들이 각출해 지불하는 희생자 구제 기금이 불어나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따라서 계약직 노동자들의 출구는 단 하나, 계약직만의 노조 설립을 위해 노조규약이라는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 측에 노조설립에 방해가 되는 규약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규직 노조 중앙집행부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9월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10표가 모자라 규약변경은

무산되었다. 분노한 계약직 노동자들은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연수원에 몰려가 단상을 점거하고 연수원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정규직 노조원들의 귀가를 막고 나선 끝에 한 달 후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합법노조로 가는 길은 그렇게 험난했다.

한달 만에 속개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마침내 노조 규약 상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규직 노조 중앙집행부의 무성의와 회사측의 온갖 회유를 이겨내고 얻은 성과였다.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조정

합법노조를 만들었는데도, 회사측은 여전히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시했다. 관찰관청으로부터 노조필증을 교부 받은 뒤, 회사를 상대로 6차례나 교섭을 시도했지만 회사측은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11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으로부터 날라 온 대답은 6천여 명에 대한 해고 통보였을 뿐이다.

19년 근속한 김 씨도 11월 말 해고되었다. 사유는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것. 김 씨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이미 19년간을 그렇게 일해왔던 김 씨였다.

한편, 대구 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정해졌더라도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려 한국통신측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 때도 회사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장으로서 이례적으로 합법 파업이 가능했던 것도 회사측의 태도가 워낙 안하무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3일 8백여 조합원의 참여 속에 시작된 총파업이 40일을 넘어섰다. 그러나 파업 중에도 비보는 이어졌다. 114 여성 계약직 노동자 1천5백명을 2월말까지 감축하겠다는 회사측의 발표였다. (기명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1월 30일(화)

제 17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년간 복역했던 장기수 김영식(67, 전주 거주) 씨가 자신의 전향을 철회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김씨의 전향철회는 지난 99년 정순택, 유연철 씨가 공개적으로 전향을 철회한 이후 처음이다.

김씨는 29일 전주 교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직적인 고문과 감압에 못 이겨 전향을 했다"며 "강제전향은 나의 의사가 아닌 고문에 의한 것이기에 전향취소를 명백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는 "세월도 화해의 길로 가는데 나만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웠다"며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을 벗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밝히고 복송을 요구했다.

김씨는 작년 9월 복송된 비전향 장기수 조창손, 장병량 씨와 함께 62년 남파됐다가 부산에서 체포됐다. 기자회견에는 박봉현, 김기찬, 오기태 씨 등 장기수 11명, 한상열 목사, 문규현 신부 등 전북지역 종교인,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 장병수 우석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찾아줄 것"과 "복송을 원하는 모든 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씨의 전향 공작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문승호 교회사·정화선 간수 등 4명, 같이 복역하던 폭력 사범 원심실 등 6명이다.

회견에서는 또 강제 전향 공작을 이

기지 못하고 자살한 김기호·신춘복 씨, 교문후유증으로 사망한 변치수 씨의 사례도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강제전향 공작은 김대중 납치사건 직후 73년 가을 광주교도소에서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

했다. 전향공작반은 김씨에게 구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은 물론 폭력사범을 동원해 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향 후 15년 동안 옥살이를 더하다가 88년에 출소했다.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은 "63명의 장기수들이 복송됐지만 아직도 많은 장기수들이 전향이라는 명에 때문에 북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 작업과 여러 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복송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태섭)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홍준표)가 각 지방조직별로 조직정비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5차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파업 48일째인 29일 지역본부별 임시총회를 열어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1일 대구, 대전충남, 충북, 전북지역본부 등 상경해 5차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역과 경기지역본부도 29일 총회를 열었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27일 열린 파업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상경투쟁 △한통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강화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삼급단체와의 연대강화 등 5차 상경투쟁에서 투쟁의 교배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한통계약직 노조 홍준표 위원장은 29일 "4차례의 상경투쟁을 평가한 끝에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는 요구를 더욱 분명히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상시근로자인 1회 이상 계약 갱신사원 정규직 전환, △상시적인 한국통신 업무인 100번, 110번, 114 번호 안내국, 고장 수리, ADSL 가설 수리 등은 도급화 할 수 없고, 도급시행중인 업무는 즉시 중단, △합법행위의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 전액 보상 등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홍 위원장은 "이미 4차 상경투쟁 중 추위에 쓰러진 이동구 조합원이 사실상 회복불능 상태이고 조합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질박하다"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한 배경을 전했다.

또 한통계약직노조는 대외협력국을 신설하고 조직국을 강화하는 등 중앙지도부를 보강했다. 노조는 "2월 중 114 번호 안내국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이뤄지던 조직화 사업을 조직국을 통해 중앙에 집중하고 삼급단체 등 각급 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직 노동자의 파업을 관망해왔던 한통 정규직 노조도 최근 도급화 반대 등의 요구를 내거는 등 한국통신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통 정규직 노조는 이동걸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따라 30일 우면동 한국통신 연구개발센터에서 전국지부장 회의를 열어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심보선)

설 연휴에 이은 인권운동사랑방 모모지로 인해 다음주 한 주간 인권하루소식은 쉽니다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가 추락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장애인용 죽었다. 서글픈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지하철 그리고 열차 역 계단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분주하게 설치되었다. 그 공사 장면과 설치된 리프트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어떤 풍경을 그려 넣어 주었던가? 그것은 마땅히 장애인의 인권과 그리고 사회의 복지에 대한 기쁨의 풍경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번 사고 및 그 동안 몇 차례 벌어진 사고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과거 언젠가 지방의 한 열차 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느라 계단 전체를 다시 공사하던 일이 있었다. 매개한 연기를 피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육교 새로 세운지도 얼마 안 지났는데, 또 웬 공사야?", "장애인 시설 설치한대.", "참, 돈 많군."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순간 나도 "그대 그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게 될까?" 이런 시설을 설치하느라보다 차라리 그때그때 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동차 등을 타고 내릴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로서 그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랬던 것이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우리 문화와 인권의 향상을 반영하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천덕꾸러기 이물질이었던 것이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역 관계자들 혹은 작업 연기를 마시며 통행하는 사람들 마음 한편에 장애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 건설의 기쁨이 자라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공사를 위한 예산은 어떤 다른 돈보다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 그 공사가 장애인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고 삶의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품위 있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에 사랑을 키워 주리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냉소주의와 편협한 이기주의 속에서 설치되는 장애인용 시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 공감 없이 마치못해 설치된 시설은 결국 장애인의 삶을 끌어 버리고, 장애의 처지 그리고 이 사회 자체를 더욱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장애인용 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위선적인 장식이자 음흉한 포장이었으며, 장애인에게는 하나의 멧이었던 것이다.

생의 고통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공명이 따라주지 않는 인권의 구호와 제도는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할 따름이다.

필자는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1.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김대통령,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추려면 국보법 개정해야"(1/13, 15), 자민련, "국보법은 한자도 못 고친다" 당론 재확인(1/15), 이회창 총재 신년회견, "국보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인권보호 가능하다"(1/16), 민주당의원·여야의원 7명, 자민련,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존치시키려는 상황에서 크로스보팅 추진(1/16, 24), 김종권 민주당 대표, "국보법, 크로스보팅은 부적절"(1/26)

2. 인생을 '유배'당한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
정치수배자,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감옥농성 시작(1/18), 북송좌절 장기수 정순택 씨, 북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공개(1/14)

3. NMD는 미국 군수산업 생존 위한 전천후 방어망
미국 국방부 무기실현 책임자, 부시 행정부에 "NMD 계획 신중 추진 촉구"(1/16), 중국, 미국의 NMD 강력히 반대 거듭 표명(1/27)

4. '지구를 떠날 것'을 강요당하는 장애인
주요대학 장애인 대졸자 15명 중 취업자는 단 한 명(1/16),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부러져 1명 숨지고 1명 부상(1/22)

5. 미국과 '선린관계'를 해치는 시위는 안 돼!
경찰, 소파개정 요구 시위를 급습해 3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감금(1/16), 경찰, 문정현 신부의 '1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사, '민주화 유공자 인정'(1/20), 의문사진상규명위,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최석기·장준하 선생 사건 등 75건에 조사개시 결정(1/22), 삼청교육대 사건 직권조사 결정(1/27)

8. 민간인학살 진상규명할 생각 있으면 법을 만들어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청원(1/26), 제주 4·3 유족, 국방일보 기사 왜곡에 해명 등 요구(1/25)

9. 활개치는 '자본',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ILO 2001년 세계고용보고서, "노동자 3명 중 1명은 실업자거나 준실업자"(1/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삼성그룹 내에서 '감히' 노조결성을 추진했다가 '찍힌' 노동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을 흉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1년 1월 17일, 2000년 12월 20일자 참조>

이날 공판에는 박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세 명의 인물 가운데 경비원 정주현 씨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 박경열 씨의 가방에서 칼자루 비슷한 것이 보여 검문을 하려했으며, 검문을 거부하는 박 씨에게 계속 소지품 확인을 요청하자, 박 씨가 '건드리지 말라'며 칼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 씨는 "박 씨가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들어 겁이 났다"고 말했다. 정 씨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고, 상황이 진정되면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으며, 대화과정에서 박 씨는 칼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비실에 있던 박 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박 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이로써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 명의 증인이 모두 법정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긴 하나, 증인 가운데 박 씨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지만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는 권 팀장의 진술은 여론을 낚았다. 또한 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정주현 씨 역시 "박 씨의 석방을 위해 탄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가족의 요청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역시 박 씨의 처벌사유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씨가 회사 간부들을 '협박'해 얻어내려던 내용이 '동료 노동자의 조속한 귀국'에 불과했으며, 그들에게 직접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누가, 왜 박경열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재판부(수원지법 형사8단독, 이주환 판사)는 다음 공판 날짜를 2월 27일로 고지했다. 구속사건치고는 공판일이 아주 멀찍이 잡힌 경우다. 특히 2월 중순까지 법원의 정기 인사

알립니다

매달 말일 내보내던 <이달의 인권하루소식>을 이번 달부터 '호름과 쟁점' 중심의 <이달의 인권>으로 개편해 내보냅니다.

2001년 1월 31일(수)

제 17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이동이 예정돼 있어, 선고는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박경열 씨는 최소 6달 이상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창조)

삼성생명 해고자 구속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지난 20일 '삼성생명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이하 삼성생명 해복투) 윤진열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경 관악구청 앞에서 관악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관악구청 앞에서는 삼성생명 해고자·동맹력시 해고자를 포함, 봉천3동 철거민, 대학생 등 1백여 명이 △삼성의 무노조 정책 철회 △원직 복직 △강제 철거 반대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2001년 동계 노민학(노동자/빈민/학생) 연대 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

윤 위원장은 집회에 앞서 "관악서 형사들이 17일 오후 전례투 차량 2대를 견인해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방송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중이었으나, 농성장을 뒀던 관악서 형사와 의경들에 의해 차량 안에서 연행됐다.

삼성생명 해복투 손정미 씨는 "형사 5명이 윤 위원장의 목도리를 잡아 덩겨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엎드린 위원장의 복부를 수회에 걸쳐 발로 차며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이 체포 때 입은 부상으로 고통을 계속 호소했으나, 27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 진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농성을 벌였던 서울대 유제명(20) 씨와 중앙대 김정기(19) 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심태섭)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흐름과 쟁점

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개됐다. 수십년 만의 폭설과 혹한을 견뎌가며 전개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각계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냈고, 침잠해 있던 개혁입법 투쟁을 되살리는 소중한 불씨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명동성당 단식농성에 동참한 사람만 110명에 달했고, 3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기구 대표자들이 현 정권에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농성투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농성을 마무리한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2. 인권개혁 발목잡기 여전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정부업무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보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약속(1/11, 1/13), 민주당 소장과 의원 18명,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건의(1/11), 여야의원들, 국보법에 대한 크로스보딩 제안(1/16, 24) ... 그러나, '수구보수' 자임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국보법 존치 강변(1/15, 16), 조선·중앙 등 보수언론 역시 사설을 동원해 국보법 존치 주장

3. 흑한 속 처절한 외침...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투쟁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

지난해 연말까지 7천여 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초(1/2)부터 분당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중단, 계약직 차별 철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성 도중 한 노동자가 반신마비 증상을 일으켜 쓰러지기도 했으며, 노동자 5명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절규(1/16)하기도 했으나, 회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설 연휴 동안 귀향했다가 30일부터 다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 이랜드 노동자 투쟁

최저생계비 이하였던 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백여 일이 넘게 파업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조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경 속에 11일간 단식투쟁을 전개(1/10-21)했다. 수배중인 박성수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채, 노동자들은 하나둘 지쳐가고 있고, 농성장이 위치한 중계아울렛 앞에서는 연일 노동자들과 용역경비원들 간의 소모적인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4. 노근리 책임 결국 발뺌...사과·배상도 없이 '유감'만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발표. 미국은 노근리 학살행위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발표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1/12) ...노근리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들, "실체규명 미흡, 사과 없다"며 발표 결과 수용 거부

5. 성희롱·성추행에 잇따른 경종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성컨트리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및 이랜드 그룹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판정 통보(1/10), 한성컨트리클럽과 이랜드 그룹에 시정조치 권고...육군, 부하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으로 "보안관찰 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울여성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과 관련,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며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하다고 판결(1/16)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로 생긴 재산에 대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1/17)

논평

◎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부처(1/6)

◎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1/13)

◎ 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1/20)

인권하루소식

2001년 2월

(제1783호 - 제1802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일(목)

제 17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옥아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

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의장,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및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94, 95년 서울지하철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등의 파업을 '조종·선동'했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위반,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관련 현주건조물침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노동자·서민의 노동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보선)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중 대표적인 사람은 전노협 단병호 의장(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서노협 김영대 의장, 93년 이흥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 홍영표 대노협 사무차장, 94년 양규현 전노대 공동의장, 서선원 전기기관차노조협 의장, 손봉현 현재 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제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다만 개정법에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 한해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상담소, 사회단체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97년 법개정 이전 94~95년 행위당시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를 적용받아 2001년 1월 31일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97년 3월 개정때까지 유지된 조항. 다만 총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86.12.31. 추가된 단서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자신의 '전향 무효'를 선언한 장기수 김영식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던진 한마디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전향 공작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들려주는 외침이다. 김씨는 이날 회견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문이 행해졌다"며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국가폭력을 고발했다.
 그의 고백 속에는 73년 당시 '전향공작 전담반'에서 활약했던 8명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있다. 이는 그가 지난 28년 동안 전향 공작의 악몽을 단 하루도 떨쳐버릴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그의 양심선언은 전향공작에 따른 인권과피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바람이다.

전향공작은 '지옥'에서 행해졌다

김 씨는 73년 10월부터 2개월에 걸친 전향공작에 못 이겨 전향서에 날인했다. 그가 당시 복역하던 교도소는 장기수들 사이에 '지옥'이라 불리던 광주교도소였다. 즉 그 '지옥'은 '전향공작 전담반'이 폭력사범 재소자들까지 앞세워 전향공작을 한 것으로도 악명 높다. 일명 '떡방'이라 불린 이 재소자들은 같은 재소자 처지인 사상범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며 전향을 종용했고 그 방법 또한 비인간적이기 그지없었다. 일단 구타가 시작되면 수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보통이고, 온몸을 고문틀에 묶은 다음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입과 코를 천으로 막고 주전자로 수십 리터의 물을 얼굴에 들이붓는 것이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더하면 고춧가루고문이 된다. 이런 생활 두 달만에 그는 교도소 교무과에 끌려가 이른바 '전향'을 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2년까지 6~7백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가 2, 3년에 걸친 무차별적인 전향공작으로 약 100여 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 그는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 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며 "73~75년 사이의 전향

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치밀한 인권유린 사건"이라 말한다.

전향고문, "국가에 의한 치밀한 계획"

72년 당시 교도소에는 만기출소를 앞둔 비전향 장기수들이 많았고, 정국은 7·4 공동성명, 10월 유신,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런 때 장기수들이 대거 출소하면 사회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는 판단 속에 전향공작은 수행됐다. 이처럼 전향 공작은, 정권의 보호를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파괴한 반인권적 대사건이다.

김씨는 전향 후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출소해서도 "지나온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가족과 떨어져 이별하고 청춘을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양심뿐이었는데 이따마저 빼앗겼으니 '나는 버러지가 됐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괴로워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옥중사망 조사개시

이런 가운데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비전향장기수들의 옥중 의문사를 조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20일 7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하며 비전향장기수 옥중 사망사건 5건도 여기에 포함했다. 그 5건은 박용서(74년 대전), 손윤균(76년 대구), 최석기(80년 대전), 변형만·김용성(80년 당시 청송보호감호소) 사건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진정 내용에서 이들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드러나지만 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항거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그 수감 경위나 사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는 그 인권 의 회복 또한 국가의무라는 원칙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도 "변형만·김용성 씨의 경우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형기를 마치고 고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징역 아닌 징역을 산 사람들"이라며 "직접적 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전향공작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생존해 증언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나 강제 전향공작은 죽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김영식 씨 경우같이 전향공작의 피해를 지금이 순간까지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장에는 비슷한 처지의 장기수들이 10여 명 함께 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이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점진적으로 '전향 무효' 선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더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이 복송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전향공작 전담반의 고문행위 등에 대한 증언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권회장은 또 "현재 복송을 원하는 전향 장기수는 약 3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 꼭 해야한다

그 자신 참혹한 전향공작을 겪기도 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그들을 복송하더라도 전향공작 자체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남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지 않았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그의 책 '한국과 분단사회'에서 "사상범에 대한 '전향공작'만큼 어떠한 법조문이나 기록물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통제체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일(금)

제 17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

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98년 방북했다가 지난해 8월 귀국하자마자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9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재판 거부'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공판이 시작되자 "6·15남북선언에 의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국가보안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고, 3차 공판부터는 아예 법정출두조차 거부했다. 담당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선고 때까지 결석재판이 계속됐으며, 김 씨에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국보법에 의해 죄인을 만들어내는 재판 자체를 인정 못 한다"며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김대원 씨는 11월 초순경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물조차 입에 대지 않는 단식투쟁을 벌여 14일만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는 후송된 뒤에도 물만 마시며, 12월 31일까지 극한의 단식을 했다. 김 씨의 단식투쟁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측은 "단식을 하면서도 독방에서 구호와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정신감정 조치를 결정해 김 씨는 한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정신 감정 결과, "의지가 남다름 뿐 지극히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네 번째 단식투쟁 중이다.

김 씨의 법정 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그는 국보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장진숙 씨도 1개월이 넘는 경·검할 수사 과정 전부를 묵비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국보법을 무시하는 실천들이 국보법 폐지를 앞당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심태섭)

"희망의 촛농을 만들고 싶다"

한 시민의 백일기도

대구의 한 시민이 홀로 시위를 하고 있다. 회사원 조진석(27) 씨는 퇴근 후면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대구 국제보상공원의 달구벌대종 앞에 선다. '국가보안법 폐지·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라는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한쪽에 세워둔 채 촛불을 들고 벌이는 이 시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일이다.

조 씨는 "국가보안법은 실정법의 외피를 쓰고 일반 국민의 생각을 제한하는 국가폭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아쉬워하던 그는 "인권활동가들이 연말연시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뭔가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추운 연말연시 단식농성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몫을 하기로 했다"는 조 씨. 그는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라는 소망을 안고 1백일간 '희망의 촛농'을 켜기로 했다. 그는 "치열한 투쟁방식도 아니고 힘찬 구호도 없지만 인권이라는 화두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설 연휴도 거르지 않은 조 씨의 촛불시위에 대해 시민들은 이상해 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그들 중엔 음료수를 건네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다. 시민단체들의 냉담한 반응과 추위가 그를 힘들게 하지만, 친구들과 시민들이 자신을 격려하며 시위에 동참해줄 때면 힘이 솟는다고 한다.

한편, 조진석 씨는 '대구인권센터 준비위원회'라는 이름 아래 인권단체를 설립할 준비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양 측면으로부터 인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는 조 씨. 그는 대구의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모임' 사무실을 임시 연락처로 삼고 있다.

지금 조진석 씨의 바람은 매일 밤 8시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이 달구벌대종 앞에 모여 '인권촛불'을 들고 희망의 촛농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심보선)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지난해 연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13건, 성희롱 2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발간한 사례집에 따르면 △합법파업에 참가했는데도 관리자가 반성문을 요구한 행위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일근무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행위 △회사측이 사내 유인물을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한 행위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설명 없는 계약해지통보서 발부 △노조 간부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 △업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임에도 해고한 사례 등 부당해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노조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며, 2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다녀온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시 본당 한국통신 본사 앞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반대·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다. 한파가 몰아닥친 2일 노동자들은 경원대학교로 잠시 거처를 옮겼지만, 본사 앞 천막농성투쟁은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창조)

<자료> 판결문

-대법원의 '보안관찰 적법' 논란-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이 1일 공개됐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대법원 제1부

사건 : 2000두8318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취소

원고 : 서준식 / 피고 : 법무부장관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0. 9. 27

선고 99누8857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제법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법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7384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제법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6.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서성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박재운

만화사랑방



** 진상규명 합시다!! **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3일(토)

제 17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경찰이 정보통신업자를 통해 민족통일민주주의전국연합(삼인의장 오종렬, 아래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빼내려 했고, 그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에서 인스정보통신을 경영하고 있는 변창수 대표(29)는 "경찰이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감시 활동까지 시키려 했다"고 2일 털어놓았다. 인스정보통신은 전국연합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다.

변 씨는 지난 1월 12일 한 남자에게서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잠안동으로 나갔다. 하지만 잠안동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자신을 '경찰'이라 밝힌 뒤, 변 씨를 차에 태워 인근 건물로 데려갔다. 그 건물 주위에는 정복경찰들이 경계를 세우고 건물 안에도 경찰이 있었다.

건물로 들어간 변 씨는 약 1시간 반 동안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로그 파일을 넘겨 달라" "돈을 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만 따로 서버를 운영하라"는 등의 요구를 집요하게 받았다. 게다가 "전국연합의 자료실, 게시판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감시해달라"는 사실상 프락치 요구까지 받았다. 그러나 변 씨는 "로그 파일엔 전국연합뿐만 아니라 인스정보통신이 호스팅 하고 있는 성남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의 기록도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변 씨가 이렇게 제안을 모두 거부하자 경찰은 그에게 '협력자 인적사항 카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다. 결국 변 씨는 인적사항을 적어준 뒤에야 그곳을 빠

져 나올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변 씨가 갔던 곳은 잠안동 대공본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

검열·불법 사찰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안 당국에 △전국연합에 대한 불법 내사·통신검열 중단 △'프락치' 감요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 김정훈 정보통신부장은 "이는 공안 당국이 일상적으로 통신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변 씨를 속여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감시에 이용하려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심대섭)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제법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경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로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의 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뿐이다. 2년마다 처분을 갱신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법무부를 안심(!)시키지 못하는 이상,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감시의 울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신념에 따른 행위의 대가로 이미 실행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출소 후의 전 생애를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일반범과 달리 사상범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상범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안관찰법은 그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다. 법률로 정해진 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불복종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일들이 반복될 뿐, 수많은 양심과 지성들의 관심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과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로조차 올라있지 못한 게 보안관찰법의 처지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폭력성과 위헌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의 침묵과 방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는 6월 예정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선고공판에 주목한다. 서 대표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감히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재판부의 용기(!)를 보고 싶다. 법원이 십수년 간 법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폭력을 대속하고,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 "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새해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 및 노상 노숙농성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단식농성을 했던 김양수 조직실장 등 3명은 단식 12일째인 지난 달 21일 단식을 중단했고 29일에는 중계아울렛 앞 노숙농성도 접었다. 이남신 노조 사무국장은 "7개월이 넘는 파업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성 정리 후, 이랜드 노조는 30일 신촌에 위치한 본사에서 집회를 열어 회사측에 성실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민주노총, 정치권 등에도 이랜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31일에는 서울지방노동청을 향한 방문, 지난 해 노동부가 약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 행정관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같은 날 박성수 회장이 장로직을 맡고 있는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 교회가 박 회장에게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충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랜드가족대책협의회'의 김해정 회장 등 3명은 지난 1일 검찰청에 △지난 해 12월 8일 중계아울렛 전산실 점거 때 발생한 관리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성실한 조사 △수배중인 박성수 회장 조사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남신 노조 사무국장은 2일 "회사가 노리는 것은 노조와해"라며 "8개월째로 접어드는 파업으로 노조원들의 생계자제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 잡히고, 양말판매 등의 재정사업을 벌이는 방법을 통해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해 규약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도급직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해 6월 16일 △불법도급 철폐 △3년간 동결된 임금인상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해 2일 현재 2백32일 제를 맞고 있다.

한편 이랜드 노조와 대학생 등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박성수 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심보선)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초 구속재판을 받던 정주익 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남경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점은 있으나 경찰의 음주진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29일 호텔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순계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심보선)

- ◎ 호텔롯데 노조원 선고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정주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정 의부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홍진오 잠실지부장, 이남경 사무국장, 최호식 잠실지부 사무국장, 이미영 조직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이진명 대의원 등 5명
- 벌금 1백만원 : 성기안 대의원 등 9명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6일(화)

제 17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 ... "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담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주된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여론수렴 미비' '국론분열론' 등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에게 있어 국보법의 변화는 언제나 시기상조였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 직후에도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를 주장했고, 98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보법 개정 권고에 이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시기상조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시대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국내외 여론이 어떠한든, 그들에게는 언제나 '시기상조'일 뿐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국보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인하기 어려운 수구세력으로서 어떻게든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전략인 셈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국론분열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면, 국민 절대다수가 국보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98년 11월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7%, 변호사의 94%, 교수의 99%가 국보법 개폐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6월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개폐에 찬성했다. 그런데 아직도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감짜'를 부리고,

예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

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으로, 해마다 약 3백명이 국보법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는 198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연평균 구속자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총 구속자 6010명, 「국가보안법 보고서」). 즉,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수구세력에 대한 눈치보기 속에서 국보법 처리가 몇 달 더 연기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것이다. (이광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집회금지구역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아래 소파국민행동)은 5일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 열린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파 재협상 △미국의 노근리 학살 사죄·피해배상 △매항리·과주 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2월 한달 내내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이 1인 시위 방식을 채택한 이유"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문정현 신부가 1인 시위를 전개

했다. 경찰은 문 신부의 시위를 직접 제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6일엔 홍근수 목사(자동차협 상임의장)가 1인 시위에 나서며, 매항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까지 연이어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소파국민행동은 "지난 1월 18일 한미정부가 개정하기로 합의해 공식 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개정과 선언적 문구만을 집어넣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사죄가 아닌 유감으로, 피해배상이 아닌 장학금과 위령비로 학살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미국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대섭)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때 : 2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오는 법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기독교회관 방향 출구로 나와 100m 거리
- 발제 : 김도형 변호사
- 준비물 : 회비 2천원 및 필기도구
- 문의 : 배경내(02-3675-5363) / 이주영(02-741-5363)

정부는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병형근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조건이 현저히 악화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빈곤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노동법 개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아중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 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심하게 스치고 지나갈지도 몰라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서울여성노조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꾸준히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토요일 오후를 여유롭게 즐기는 명동거리의 시민들 사이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인정하라"고 외치며 거리 서명을 받기도 했고, 노동장애인아카데미, 장애인실업자연대와 함께 "실업자노조가입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여성노조의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만 달랑 제기해 놓은 채 뒷집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둘째, 실직자의 노조 가입 권리는 일찍이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었고 정부에서도 99년 중반까지 법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진작 밝혔었다는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9월, 구직 중인 근로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재계의 반대가 거세자 11월 차관회의에서 "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에게 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실업자동맹을 구성하는 등 사회불안이 열려된다는 등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대 이유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로 노사정 위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무슨 시간의 낭비인가 말이다. 하긴, 자본과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수레바퀴를 붙들어맨 채 그 시간만큼 번 셈이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맹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으니, 그동안 술하게 있었던 일처럼,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노동부만 몰라라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아무리 많이 거론되고, 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교섭창구 등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민주당, 또다시 수구세력 눈치보기
민주당 김종권 대표,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하다"(2/2), "김정일 위원장의 담방 이후 개정 추진하겠다"(2/4)며 국보법 2월 처리 사실상 유보...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미래연대', 당에서 국보법 개정불가 당론으로 강요할 경우 따르지 않기로, 7조 고무찬양죄 적용요건 강화에 잠정합의(2/4) 민주당내 개혁성향 의원, "국보법 조기개정, 야당 개혁파와 연대" 표명(2/4)

2. 개신교, 3대 개혁입법 적극 처리 요구
한국기독교총회장로총회, "근본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1/30)

3. 말보다 실천부력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집중 근로감독 방침(2/2)

4. 만만한 게 서민이구만!
보건복지부, 소액진료비 개인부담 추진...사회단체들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요구하기로(2/4)

5. 자랑할 일이 아님데
국내 벤처업체 (현대정보기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전자주민카드 사업' 우선 협상 회사로 지정돼(1/30)

6. 정형근, 이번엔 과연?
검찰, 정형근 씨가 서경원 전의원의 등을 고문한 사실 인정...고문혐의 불기소하고 명예훼손 등만 기소(1/30)

◎ **해외 인권소식** ◎

1. 날로 확산되는 세계화 반대시위
민간단체들,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 열리자 세계화반대시위 전개, 120명 현지서 체포(1/28)...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반다보스포럼 진행, 경제식민주의 부활비판, 반다보스포럼 연례회 결정(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첼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관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쟈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인종차별 반대시위 나서(2/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7일(수)

제 17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수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 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수엘라 현지 기업)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베네수엘라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는 세계최초의 국가단위 전자주민카드 실용 사례"라고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42개월 동안 베네수엘라 중앙정부와 각 주 및 도시를 연결하는 행정전선망·주민등록망 구축, 지문인식, 위조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96년부터 전자

주민카드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국제입찰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기술 수출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각 나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자주민카드의 목적과 기능은 같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 정보를 통제·감시하는데 우리 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과거 영국이 자국에선 아편을 규제하면서 중국에는 팔아먹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계에서는 첨단 기술을 수출해 큰돈을 벌게됐다고 좋아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카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이

라고 경고했다.

국내선 '인권침해' 논란 속 백지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김영삼 정권 시절 '행정간소화·사회비용 절감·정보화 마인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 등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목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권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 과중한 재정 부담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난여론에 밀려 당정 합의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한편, 현대 컨소시엄은 10일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심태섭)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집시법 위반,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시 주거침입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당성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시집 「참된시작」을 취득·소지함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91년 사건과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사건이 병합돼 치러졌으며, 앞서 검찰은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창조)

☞ 사건개요 2면에

장애인들, 철로 점거시위

오이도 참사 진상규명 촉구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6일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인 뒤,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는 장애인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오이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전체 지하철 리프트실태에 대한 제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장애인 가운데 10여 명은 지하철

☞ 2면으로 이어짐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질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 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인권개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질의서에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 △국보법에 의한 인권(양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는가 등을 물었으며, 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단체들은 의원들의 답변이 모이는 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보법 개폐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 박진 사무국장은 "지금 정치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국보법 개정·폐지 논의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명확한 입장을 알기 위해 질의를 하게 됐다"며 "국보법 개정·폐지 논의에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태섭)

천주교 사제단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전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기호 신부 등, 아래 사제단)이 3대 개혁입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사제단은 6일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에서 "지자체 선거, 월드컵 경기 등 일정으로 볼 때 급변 상반기에 김대중 정부의 개혁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며 개혁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대

단히 불안정하고 △개혁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이 한계에 직면해 국민들 사이에 무관심과 허무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현 시국을 '위기'로 규정했다.

사제단은 또 국가적 위기는 "김대중 정부가 개혁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수구성향의 언론, 정당의 완강한 저지를 뚫고 나갈 힘을 갖추지 못해" 생겼다고 진단하면서 개혁의 방법론은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개혁실천의 최종 판단자료"로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사제단 공동대표인 박기호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현수막을 내걸고, 교계언론에 광고를 내는 한편, 각 교회에서 강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제단은 오는 19일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시국기도회도 가질 예정이다. (심보선)

(1면에서) 장애인 시위

☞ 1호선 서울역의 선로로 내려가 약 3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어 플랫폼으로 나와 해산하려던 장애인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며, 6일 밤 현재 32명이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대문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동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널리 알려내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창조)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91년 명동성당 농성 사건(집시법 등 적용)

91년 4월 강경대 타살사건 등으로 노태우 정권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정국에서 5월 8일 김기철 씨의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공안당국은 김기철 씨의 죽음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라고 조작해 재야 운동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정국의 반전을 꾀하고 나섰다. 이에 서준식 씨 등 각계 인사들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한달여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검찰과 대치했다. 명동성당 농성을 마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한 서준식 씨는 '강경대 씨 장례행렬에 따라가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88년 출소 후 2년여 동안 보안관찰피처분자로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양은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였지만, 그 내막은 유서대필사건에 저항한 것에 대한 '패썸죄'였다. 서 대표는 당시 6개월간 구속수감됐으며, 구속만료기간이 다 될 즈음 1심 선고가 내려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국보법 등 적용)

97년 9월 24일-10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됐다. 당국이 홍익대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1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탄압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해 11월 4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서준식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의 기소 사유는 영화제에서 상영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국보법 위반)이고, 홍익대측의 허락없이 영화상영을 강행(주거침입죄)했으며, 거기에 덧붙여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서 대표는 2개월여간 구속수감됐고,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8일(목)

제 17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고 하는 데 대해 3대 개혁입법 연대체가 7일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위' 등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 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불모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민가협), 김중배(참여연대), 이종린(범민련) 씨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호철 소설가, 신창균 前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주화 운동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고 반문하며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낡은 잔재를 확실히 털어내지 않고는 이 사회에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 칭하는 정권이라면 국가보안법·인권위원회·부패방지법 3가지 현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전 민중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자동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동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쭉내면서 저항하고 있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개요

◎ 개혁을 고민하는 여야 의원·사회단체 대표자 만남

· 일시 : 2월 10일(토) 오후 3시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내용 : 정치개혁과 3대 개혁입법, 시민운동과 개혁적 의원간의 협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개혁의원의 자유도론이 진행되며, 사회단체 대표들과 의원들이 정치인에게 보내는 글, 개혁을 위한 다짐 등을 각각 발표한다.

◎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 일시 : 2월 21일(수) 오전 10시
기득권에 좌절된 개혁·관료주의의 횡행 등에 대해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비정규직의 고통, 언론·교육 개혁 등 사회의 총체적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담아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한다.

◎ 김대중 대통령 및 이회창 총재 면담

· 일시 : 2월 19일에서 24일 사이 / · 추진주체 : 시국선언 대표단

◎ 3·1 개혁실종 규탄 시국대회

· 일시 : 3월 1일(목) 오후 2시 / · 장소 : 전국 주요도시 도심

◎ 3대 개혁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 기간 : 2월 12일~28일
· 장소 : 서울 5개 지역(서울역/종로/신촌/대학로/명동) 및 각 지역

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부패방지법도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한다고 하는 '특별감사제 도입, 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수단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개혁성향의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자 만남, 여야 총재면담,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3월 1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심태섭)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경천 법무부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며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법안내용을 보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등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인권위원회에 시행령 및 규칙 제정권 부여,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 등은 논란 끝에 복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면책특권, 증인신문권, 시행령 제정권, 상임위원 숫자 등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해 왔던 사항들이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는 △인권위원회에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기구로 된다고 해도 시행령 제정권을 국가인권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가질 경우 결국 법무부가 사실상 인권위의 주무부처이자 상급기관이 되고,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2명 등 극히 소수로 할 경우 인권침해 증거인멸, 조작 방지 및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긴급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인권위가 실효성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일 발표내용 중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애초 '헌법상 기본권 침해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부분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한정하고, 차별행위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당정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수준미달의 '당정합의'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보선]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요구하며 철로를 점거한 장애인운동 단체 회원들이 구속될 처지에 있다.

6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철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아래 오이도역 대책위) 소속 회원 31명 중 박경석 집행위원장, 전국에바다대학생 연대회의 김도현 정책국장이 7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7일 풀려났다가 수시간만에 다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에서 철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각각 성명을 통해 장애인에게 이동권, 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언론의 철로점거 보도의 편향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서울 DPI는 "(오이도 참사는) 사회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배제가 빚어낸 것"이라며 "오이도 참사와 관련한 당국의 성의 있는 사건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DPI는 또 "(6일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3층에 올라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집중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연행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6일 KBS 저녁 9시 뉴스에서 철로 점거에 대해 "왜, 지하철을 못 타게 하나? 너희들 권리만 보장하나, 우리도 보장해야지!"라는 멘트를 뽑는 등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황이나 정부의 책임은 간과한 채 시민의 불편함을 다루어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고 지적하고, KBS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김형수 기획국장은 "수직형 리프트는 안전관리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후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직형 리프트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단형 리프트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획국장은 또 "오이도 수직형 리프트 추락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이도 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행자 석방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 규명 △철도청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에는 김도현 정책국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마포경찰서로 향의 방문할 계획이다. [심대섭]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일시 : 2월 10일 (토) 오후 3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 발제 : 김도형 변호사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대위)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9일(금)

제 17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초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 행정자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결면 처리 강화' 방안을 내놓

았지만 이는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보안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하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며 "현 상황은 보안강화로 해결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개정할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미봉책만 내놔"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이처럼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문,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여 강력한 신분확인 수단으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문

날인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가가 소유한 개인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양한 신분확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진보연대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998년 초 감사원은 당시 추진 중이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행자부가 관계법이 마련되지도 전인 97년부터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등 모두 480여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을 도입했지만, 불법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심대섭]

선로 시위 장애인 모두 석방 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속보) 지난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철로 점거 시위 사건으로 연행됐던 장애인들이 8일 모두 석방됐다.

시위 해산 후 바로 연행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하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추후 대책위 논의를 거쳐 오이도역 참사 진상 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심대섭]

만화 사랑방



이동수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지난 2월 3일과 6~7일 3일간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인간 유전자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가 열렸다.

‘시민배심원 회의’란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자체 토론을 가정으로써, 과학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 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가 미아찾기를 위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전자정보 이용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미아찾기 유전자정보 DB사업에는 사기업인 (주)바이오그랜드가 참여하기로 해 유전자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3~40대 중반의 직장인과 대학생 등 여성 8명과 대학교수·연구원·대학생 등 남성 4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회의 기간 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심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 △미아찾기 DB 구축사업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윤리의 문제 △국내의 유전자정보 수집·이용 실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미아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배심원들은 이틀간의 토론을 마치고 7일 ‘유전자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유전자정보 특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 △

유전자정보를 사용·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자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되는 미아찾기 유전자정보 DB 구축사업은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한재각 씨는 “일반 시민도 과학기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다”며 “과학기술이 전문성의 신화 뒤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씨는 “시민배심원들의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인유전자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로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동기는?

=난치병 치료 등에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인간의 삶이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보건의로와 관련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참가 후 판단이 달라진 게 있는가?

=그렇다. 처음엔 유전자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자정보 수집, 보관을 하는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고, 과학기술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일 동안 접한 정보가 권고안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입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을 같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는?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유전자정보 이용할 때 생각해야 할 윤리적 문제부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주장하는 DB구축 필요성, DB구축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과학기술이라면 일단 어렵고, 전문적이고, 머리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스스로 판단을 포기했던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해 제안을 한다면?

=일단 대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법,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고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소비자인 시민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 회의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것은?

=미아찾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 ‘미아찾기’라는 명분 때문에 판단하기에 힘이 들었다. 하지만 (주)바이오그랜드가 기본적으로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참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아찾기’ DB 구축 사례에서 (주)바이오그랜드의 참여는 유전자정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0일(토)

제 17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신뢰성 없는 증인, 증거채택

민혁명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명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진수 씨에게 징역 3년, 이의업·박종석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혁명당에 가입해 활동한” 한용진 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민혁명당 고등학생부장으로 인정되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대상인” 박정훈 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명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 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진수 씨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 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이라며 “증거도 없고 증언도

신뢰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특히 박정훈 씨의 경우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면소되자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한호석 소장의 글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한 씨의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호석 씨 글은 작년 12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돼 있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광길)

논평

선로에 몸을 내던지며 절규한 이유

“지난 6일, 장애인 3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 움직이는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걸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소엽 씨의 일이 장애인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란 지하철 뿐이다. 택시는 비싼 요금에다 승차거부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고, 버스는 탈 수도 없고 태워주지도 않는다. 그나마 지하철엔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9년 6월 28일 혜화역, 99년 10월 4일 천호역에 이어 또 다시 리프트가 추락함에 따라 지하철마저도 죽음의 공포 없이 이용하기란 어려워졌다.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검사기준이 전혀 없고 설치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오이도역 수직리프트는 설치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들을 더욱 기막히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는 물론 시설을 설치한 철도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처는 오이도역 박소엽 씨 사망사건의 ‘공범’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든다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조차 안전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우리 사회에 과연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존재하는가?

장애인들은 선로에 몸을 내던지면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박하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뿌끼’라는 대학 구내에 자리한, 정사 각형 모양의 넓디넓은 실내 회의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4천명의 사회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곧이어 브라질 민속음악 공연단의 북소리와 공연자의 리드미컬한 몸동작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자 회의장안의 웅성거림도 잦아 들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고무하기 위해 매년 연초에 개최해오고 있는 다보스포럼에 대항해서 올해 처음 열린 브라질 포도알레그레에서의 세계 사회포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자들의 회의에 맞선 포럼

개막식에선 조직위 관계자들의 발언, 노동자당 출신인 포도알레그레 시장과 리오그랑두술 주지사의 발언, 프랑스 아탁(외환거래 파세운동 단체) 대표 베르나르 까생의 간단한 발언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 브라질과 쿠바 참가자가 소개될 땐 장내가 떠나갈 듯한 환호가 터졌고 미국참가자들에게는 장난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 합집계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했던 남미 제국 참가자들에게는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개막식이 끝나고 시위행진이 벌어졌다. 1-2만쯤 되는 시위대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전 차선을 점거한 채 약 3-4킬로미터를 행진했다. 삼바리듬의 북소리에 연신 몸을 흔들며대면서 가는 사람들, 웃음을 벗어제낀 사람들, 닭벼슬같은 머리모양을 한 사람들 시위대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다. 길거리 건물에서의 환호도 대단했다. 휴지를 찢어서 날리는 사람들, 각종 깃발을 흔들며대는 사람들. 시위에 참가한 조직도 다양했다. 브라질 노총 조합원들, 사회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당 및 여타 좌익 정당 당원들, 그리고 초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중간에 대열에 끼어들면서 약간 긴장을 조성한 무정부주의자 등.

다양한 주제 논의

개막식 다음날부터 4일간 본격적인 회의와 워크숍들이 진행됐다. 4개 대형 회의장(7백-1천5백 규모)에서 진행된 조직위 기획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각종 주제들(토빈세 도입, 외채탕감, 국제 금융기구 통제 등 금융세계화 관련 쟁점들, 자유무역체제의 문제점, 토지개혁과 관련한 문제들) 외에도, 대안 주체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안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등의 새로운 주제들이 논의됐다. 4백50개에 달한 소규모 워크숍에서는 진보진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쟁점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접근법’에서 ‘개량이나 혁명이나’까지.

마지막에 채택된 결의문은 이번 사회포럼 참가자들이 시애틀 투쟁 이후 성장해온 세력의 일부임을 천명하면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 △아프리카 흑인 및 원주민 운동에 대한 연대 △외채전면탕감 △토빈세 도입 △민영화 반대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반대 △농업개혁 △군사주의 반대(및 콜롬비아 개혁 반대) △국제기구들의 조치에 대한 반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브라질 운동사회의 풍부함

이번 사회포럼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식 참가자 4천명 이외에 일부 회의 참가가 제한된 준참가자 브라질인 1만6천명을 합하면 연인원 약 2만명이 이번 포럼에 참가한 셈이다. 조직위 예상치의 배가 넘는 규모란다. 내용적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모색됐다. 이렇게 진지한 대안모색이 가능했던 것은 시애틀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세력의 계

속적인 성장 덕분일 터이다. 포럼 성공의 배경에는 브라질 운동사회의 풍부함도 존재했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운동, 보프신부와 기초공동체로 상징되는 해방신학의 전통, 5백만 조합원(단협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천9백만)의 브라질 노총, 약 1백90개 시에서 집권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자당, MST(땅없는 사람들)의 토지점거운동(이 농민단체는 포럼 기간에 미국 다국적업체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점거해 그 활동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등. 이런 토대 위에서 외채지불 거부 국민투표운동이 가능했고, 포도알레그레 시정부의 참여예산계획이 가능했으며, 그리고 이번 사회포럼의 성공이 가능했다. 이번 사회포럼은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는 리오그랑두술 주와 포도알레그레 시의 일종의 ‘관변 행사’였던 것이다.

다음 싸움, 올 4월 케벡에서

그러나 이번 행사에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회포럼을 가능케 한 인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아탁 대표 까생은 자신이 사회를 맡고 있는 토론회에서 프로그램에도 나와있지 않은, 진보적이라 할 수 없는 전직 프랑스 장관을 소개해 발언 기회를 주는 등 돌출 행위를 몇차례 했다. 그런데 이 돌출 행위가 단순한 돌출 행위가 아니라라는 점만 지적해두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포도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포럼을 무색하게 하고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당연히도 전적으로 우리 전 세계 사회운동세력의 싸움에 달려있다. 그 첫 싸움은 올해 4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릴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회담을 둘러싼 싸움이 될 것이다. ‘움 아우프르 문도 에 쏘베셀’(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3일(화)

제 17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어야 할 조항이었

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또다시 유보시켜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해온 재계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를 그 이유로 내세워 왔다. 단위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 생기면 협상 과정도 복잡해지고 노무관리가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을 극구 저지하려는 재계의 속내는 이른바 ‘민주노조’의 건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총력투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20여 명과 사회단체 대표자 50여 명이 국회에서 만나 “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명동, 여의도, 신촌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동시에 각 부문별로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선언운동이 시작돼, 이는 23일 ‘1만인 선언’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국민행동은 온·오프라인 상의 대규모 시위 형식으로도 진행된다. 오는 17일과 3월 1일 오후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23일 명동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달리기대회가 열린다.

또한 21일부터는 여야 3당 및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도 시작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 역시 3대 개혁입법 연대기구들과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19일부터 사흘간 인권단체 자체의 연합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당초의 당정 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으로 상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둬들인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위원, 이상수 총무,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들은 결국 법무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안을 수정했다. (이창조)

원천봉쇄하려는 데 있다. 파견철폐공동대책위 구미영 집행위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이미 유령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복수노조 허용이 유보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을 받아들이주지 않는 곳이 허다한데 복수노조조차 안되면 소외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단결권 원천봉쇄 가능

특히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두 조항을 거래 형식으로 합의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하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두 사안이 ‘흥정’이 대상이 된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만순)의 정책실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업장 중심의 노조 운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동운동대오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파견철폐공동대책위의 구미영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과 대규모 사업장 노조 사이의 역학 관계를 지키기 위한 담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단위 노조와 지역별 노조와 함께 국회 통과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태섭)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게놈과 인간의 미래

인간의 존재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축복이었음을 인정할 때가 있으리라.

염기서열을 해독해 유전자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발표가 전 세계를 흥분케 하고 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세계과학자들이 인간 유전정보의 총체인 인간 게놈지도 완성, 인류의 과학, 의학사에 또 하나의 찬란한 기념비를 세웠다. 게놈지도 완성과 이를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는 질병유발 유전자 규명과 치료제 개발, 환경적 위험요소 규명, 인간의 진화 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극찬과 함께 그 기대를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간사회의 미래가 질병과 악행이 없는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작은 소리로 들릴 뿐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인간게놈지도 작성을 통해 풀어진 비밀을 활용해 30년 안에 인간은 자신의 진화 방향을 통제하고 변경시킬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2020년이 되면 유전자조작 인간을 안전하게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10년 안에 가장 보편적인 10여 가지 유전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이제 육체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유전자를 규명해 각종 범죄 등 반사회적인 행동까지도 예방·치료하는 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듯 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섬뜩하게 들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186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인 그레고르 멘델이 완두콩을 통해 유전법칙 발견한 이후 유전자 조작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동물들을 복제하게 되었다. 마침내 지난달 미국,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인간복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처럼 견장을 수 없이 진행되는 과학의 힘에 인간의 이성은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급기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각 나라마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법 제정조차 못하더니 이제 그것마저 필요 없게 되었다.

주분형 인간을 양산하는 반(反)인륜적 제양 앞에서 유전자 연구가 소수의 거대 자본이나 강대국의 이윤창출 도구로 독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막연한 나의 두려움이나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의 서막이며 인류 대제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민식/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홍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 (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요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도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 (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 (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 (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종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 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 (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 (2/6) ...3대 개혁입법 연대기구, '개혁입법 국민행동' 선포 (2/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2/6)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보법 견해 공개질의 (2/5)

6. 독재 굴레 못 벗어난 대법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복역 사실이 있는 사범연수원생 3명을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실 드러나 (2/10)

7. 1인 시위, 미대사관 앞으로
소파국민행동, 소파 제협상 및 노근리 학살 사죄, 매항리·과주 미군사격장 폐쇄 요구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2/5)

8. 강제전향은 무효!
강담 씨등 전향 장기수 33명,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 전향은 무효"라며 복송요구 (2/6)

9. 불안한 우리의 아이들
유엔아동기금, 우리나라가 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 (15살 미만) 상해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밝혀. 91-95년 상해사망률이 연평균 10만명당 25.6명 기록 (2/6)

10. 장애인 고용·소득차별 심해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하며, 15살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8.4% (18만명)로 지난해 6월 전체실업률보다 6.8배 높아 (2/7)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4일(수)

제 17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깍뎀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차 때고, 포 때고, 결국 깍뎀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 법무부에 질질 끌려 다니다 최대의 악수를 선택한 꼴이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민주당 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법안이 수정 또는 철회될 전망은 거의 없다.

법무부의, 법무부를 위한, 당정협의를

민주당은 인권위법 문제에 있어 시종 법무부에 끌려 다닌 결과, 민간단체와의 합의조차 뒤엎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어떻게든 인권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법무부의 의도가 하나하나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지난 1월 19일 민주당 내 '인권법 7인 소위'는 민간단체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인권위에서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상임위원은 4명으로 둔다"는 것 등의 시안을 확정하 바 있다.

그러나 2월 7일 당정협의를에서 인권위원의 명예훼손 면책특권과 증인신문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일 협의에서는 인권위 상임위원의 숫자를 3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시행령 제정에 법무부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으로 한정되고,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는 '성·종교·장애·나이, 고용·재해 및 용역의 이용·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 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뉠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이종걸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1월 8일 만남은 간단히였을 뿐이며, 합의가 아니라 의견청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인권위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태도는 어설피 알리바이 조작일 뿐이었다.

인권활동가들, 민주당 점거농성 전개

민주당의 인권위 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는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외면한 민주당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 활동가 25명은 오후 들어, 여의도 민주당 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등 25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 경 '김종권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 민원실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쪽에선 이종걸 인권위원장이 찾아왔을 뿐, 김종권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 10시 45분까지 계속되던 농성은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날 민주당에선 농성자들에게 대해 '퇴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심지어 민원실 책임자가 '책상 위 문서들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퇴근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불법점거'라는 핑계를 대며 강제해산에 나섰던 것이다. 해산 과정에서 서준식 대표가 전투경찰에 의해 네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으며, 건물 밖으로 끌려나온 농성자 전원이 40여분간 민주당사 앞 도로에 강제 구금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농성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석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역시 민주당사 밖에서 1시간여 동안 전경들에게 둘러 쌓인 채 노상감금을 당했다. 농성단의 한 참가자는 "민주당 내에선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 속 시원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인권위원장은 농성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법 시행령 제정에 법무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부분에 있어, '협의'는 합의보다 강도가 약한 것으로 만일 법무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냥 인권위원장 의사대로 하면 된다는 뜻"이라는 등 계변을 늘어놓아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반박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낼 생각도 있었지만, 여당과 법무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조금씩 주고받으며 양보를 했다"며 정작 당정'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에 끌려다닌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창조)

<현장> 모형감옥마저 빼앗긴 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의 정치수배자들

"저희도 아침 일찍 기사 전화 받고 알았어요, 모형감옥 뺏긴 걸".

지난해 성탄절 직전인 12월 23일 농성전막을 통째로 뺏긴 이후 벌써 두 번째 농성물품을 압수 당한 '정치수배 해제 농성단' 진재영 대표의 말이다.

13일 오전 6시경 명동성당 측은 농성단 소유의 모형 감옥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철거·압수해 갔다. "성당 정서에 배치된다"는 이유였다. 모형 감옥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있던 것으로, 농성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날마다 모형 감옥 안에서 수의를 입은 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보법 폐지·정치수배 해제' 촉구 시위를 진행해 왔다.

모형 감옥 압수 소식이 연합통신·나우누리 천우물 등 여러 통신망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후에는 70여 명의 사회단체 관계자, 청년, 학생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여 규탄집회를 가졌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봉변을 당한 농성단원들도 이날은 크게 분노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감옥 농성을 시작한 건데 감옥마저 뺏겨버리니 아예 말이 안 나옵니다." 농성단원 이동진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단순히 모형 감옥을 뺏긴 것이나 성당 측의 무모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농성 기간을 거치며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했다.

진재영 씨 등이 지난해 5월 농성을 결심한 것은, 98년부터 99년까지 5백여 일간 조계사에서 진행된 국보법 관련 수배자들의 농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태도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이는 듯 보였던 것이다. 당시 진재영 씨 등은 정치수배 해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만들어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을 비롯, 해마다 '양산되는' 학생 수배자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이기도 했다.

농성단은 모두 한총련 대의원 출신.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다. 이는 학생회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를 적용받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해마다 양산되는 학생 수배자

명동성당에 들어와 '국보법 폐지·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도 벌써 2백여 일. 그러나 처음 걸었던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명이라는 적은 인원과 명동성당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갖는 이들에게 이런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다.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 실형을 살다가 사면돼 저를 찾아오기라도 하면 '나도 차라리 저랬으면 지금쯤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수배생활 3년 차의 이동진 씨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국보법 수배 학생이나 구속자가 생기면 학교별 또는 가족 단위로 사안에 따라 대처할 뿐,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쟁점화 되지는 않는다. 올해 들어 줄었다고는 하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총련 대의원 관계로 수배·구속된 사건은 연평균 2백50건을 웃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수배 문

제를 이렇게 쟁점화시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체는 이들뿐이다.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감옥 농성단'. 이제 '감옥'마저 빼앗긴 그들에게 정치수배 해제의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심대섭)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규탄성명이 발표됐다(관련기사 2월 13일자 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노동약법조항"이라며 "5년 전 이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단결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합의하고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예기간의 만료에 이르러 조항의 폐지를 다시 5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헌법 불합치 상태를 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창조)

● 정보샘 ●

◎ 복수노조유예 합의 규탄집회

- 2월 15일(목)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옆) 앞
- 2월 1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앞(증권거래소 옆)
- 주최 : 파견철폐공대위

◎ 비정규직 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2월 15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 주최: 노동, 시민, 사회단체

◎ 비정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2월 16일(금) 오전 11시 노사정위원회 앞
- 2월 16일(금) 오후 2시 서울역(이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참가 :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운송노동자, 보험모집인, 이랜드, 한통 계약직 노조 등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5일(목)

제 17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노사정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적으로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복수노조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등의 노사정합의 비판 움직임에 대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여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거나 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여당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화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종전의 변명이 그나마 최상의 보호책"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노총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전체 사회운동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는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복수노조가 실시돼도)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산업이나 직업의 경우 비정규직만으로 노조가 구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한 기업의 노동자가 종사상의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복수노조 유예' 합의 후에 "미흡하지만 고쳐야 찬 결단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복수노조가 유예되는 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직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최근까지 견지해 온 연대기조를 살릴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2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복수노조 금지'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합의한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는 유보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5백여 명이 모여 △복수노조 쟁취 △노동시간 단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를 결의했다. 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정위의

'복수노조 금지'에 대해 ILO 등 국제노동기구에 제소, △비정규직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 사회쟁점화하고, "6~7월 투쟁에 맞춰 투쟁을 준비하자"고 결의했다.

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대체로 '열심히 싸우자'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결의하지는 못했다. (심보선)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인권위원회법안 전면 거부"를 분명히 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의 법안으로 다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14일 "법무부의 아집과 독선, 국민의 인권보다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한 민주당의 작태"를 지적하고, "인권활동가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또 "김중권 대표를 만나기 위해 당사를 찾았던 인권활동가들을 게처럼 끌어낸 민주당은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정대철 최고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의원입법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보선)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의 요구사항은 이렇다.

1) "시행령 제정은 법무부장관과 협의" : 인권위 설치 및 운영에 결국 법무부의 개입을 관철시킨 것이다.

2) "수사가 종결된 사안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제 주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경찰 지휘를 받는 경찰 포함) 기관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총 3명 이내)으로, 단, 처음 구성할 때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의사에 따른다" : 상임위원의 수는 인권위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상임위원의 숫자가 최소화되면, 인권위의 실질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애초 법무부의 안에서조차 상임위원은 6명을 두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의 국가기구화가 대체로 자리잡게 되자, 인권위 활동의 약화를 위해 상임위원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법무부와 타협해 버렸다.

4) "피진정인은 서면진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려서 조사한다. 단, 서면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 피진정인

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몇 푼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5) '인권위원회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조항의 삭제 : 인권위원회에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실업제거 위해 나설 때"

서울지역 관악주민연대, 성동희망나눔 등 9개 실업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사무국장 이수홍, 아래 서실련)가 실업운동 소식지인 격주간 <실업소식>을 창간했다. 서실련은 지난 7일 창간호 머릿기사에서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그 동안 만들어졌다는 일자리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실업문제와 사회문제들에 대해 같은 눈 높이로 고민하고자 소식지를 기획하게 됐다"고 발행 취지를 밝혔다. 이전까지는 월간 <실업극복과 일>(관악주민연대 발행)이 유일하게 실업운동 소식을 다뤘다.

A4용지 4면으로 발행되는 <실업소식>은 △실업문제 현안 및 쟁점 △사회 쟁점 해설 △주요 단체 동정이나 행사 등을 실을 계획이다. 창간호는 '제2의 실업대란, 제일은행 소액계좌 수수료 제도, 실업자 노조원 인정 판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토론회'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실업소식>은 현재 약 500여 단체에 팩스로 배포되고 있다. 개인 구독자는 10명 정도인데 이는 <실업소식>이 개인보다는 단체들을 주요 구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인 유의선 씨는 "서실련 소속단체에서 소식을 취합해서 보내고 편집진과 자원활동가들이 기사작성 등을 맡는다"며, "실업운동을 하는 단체들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실업소식>이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이제는 실업문제에 대해 '극복'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에 대한 차별과 소외, 실업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업운동'을 제안할 때"라며 또 "실업운동이 앞으로 빈곤·복지 문제 등과 밀접하게 이어져 나갈 전망이어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실업소식>은 이메일과 팩스, 두 가지 형태로 구독할 수 있다. 이메일로 구독하려면 진보넷(www.jinbo.net)에 접속해 복지(welfare)나 노동(labour) 분야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면 되고, 팩스로 받으려면 서실련(02-848-0600)으로 구독 신청을 하면 된다. 구독료는 무료다.

서실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다루던 서울지역 제 사회단체들이 99년 4월에 구성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center.or.kr (심태섭)

그밖에 증인신문권과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삭제됐다. 또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가 인권위원 선정에 간여할 길을 만들어 놓았고 소속없는 국가기구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휘하에 두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초 인권위를 민간법인으로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하가 인권위의 국가기구화를 저지하기 어렵게 되자 인권위를 최대한 약체화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결과,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성공을 거둔 셈이다. 오직 독립적 국가기구라는 '허울'을 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6일(금)

제 17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페이지 9 · 개정 49 · 존치 9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 입장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1)이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2백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73명의 응답자 가운데 국보법 개정 조차 반대(시기상조론 포함)한 의원은 김용갑, 김중하, 박재욱, 신경식, 안경률, 조응규(이상 한나라당), 안대륜, 정진석(자민련), 김용환(한국신당) 의원 등 9명이다. 이 가운데 김용갑, 조응규, 김용환 의원은 "과거엔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 의원은 김경천, 김성호, 김희선, 신계륜, 이창복, 장성민(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원웅,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송석찬(자민련) 의원 등 9명이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 세 의원은 "당론과 다르더라도 소신대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주장을 개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49명은 국보법의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인권침해와 남북관계"를 들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하지만 정치현실상 개정 쪽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개정 대상으로는 2조(반국가단체), 7조(고무찬양), 10조(불고지), 18조(참고인 구인·유치), 19조(구속기간 연장), 21조(상금) 등이 지목됐으며, 이 가운데 7조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46명)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나머지 6명은 '당론에 따르겠다'는 등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응답 결과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중대사안이므로,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는데도 대다수 의원들이 답변조차 회피한 자세에 실망했다"며 "국회는 스스로 알맹이 없는 국회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조)

☛ 2면에 국보법 개정 찬성 의원명단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32년만의 폭설, 서울의 교통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눈발도 복수노조 쟁취를 위한 행군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15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시킨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복수노조 허용하고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라!" 휘날리는 눈보라에 온몸이 흠뻑 젖어 들어가도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그러던 중 집회는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자 5분도 안 돼 한국노총의 한 간부가 "여기가 어딘데 소릴 치느냐"며 집회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심지어 구호가 적힌 피켓 2개를 빼앗아 찢어버리기까지 했다. 이어 한국노총 관계자 20여명이 가세하면서 집회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돌아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선배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파견철폐공대위 구미영 집행위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유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발전과 연대를 운운하는데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진정 운동대오를 분열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반성해 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복수노조 유보를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성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은 14일 성명에서 "한국노총이 정부가 던져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당근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 단결권을 팔아먹었다"며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만 쌓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복수노조 유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15일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을 박살낼 것과 복수노조 허용 유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은 16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하고 민주노총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심태섭)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대구교도소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의 수술을 장기간 방치하고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경식(51세) 씨는 지난해 6월경 어깨를 심하게 다쳐(우측견관절부동증)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계호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 더구나 최 씨는 당뇨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데다 독방에 수감돼 있어 가족과 본인의 고통과 걱정은 크다. 가족들에 의하면 최 씨는 조속한 수술을 요청하기 위해 소장과 의무과장 면담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고, 법무부에 내리던 청원마저 불허됐다. 최 씨의 친척인 김정애(평택 거주) 씨는 "외부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고, 6개월 전부터 자비로 수술하겠다고 했으나 소측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교도소장 면회신청이 거절되자 지난 달 설 연휴 즈음 법무부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 씨 사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글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최 씨는

친척 김 씨에게 지난 8일 보낸 편지에 "교도관이 홈페이지에 항의했다고 '이제는 병원에서 약을 타다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히고 "가족들이 직접 병원에서 약을 타다 택배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최 씨는 "치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벌을 주기도 했으며 의무과장으로부터 와서 허가증(누워 있을 수 있는 허가)을 받았으나 모포를 비롯한 이불조차 깔지 못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수술" 요청에 이 핑계 저 핑계

반면, 대구교도소 의무과장은 "최 씨의 상태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요할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니며 독방수용은 팔근육을 완화시키는 운동을 하기 위한 배려"이며 "심장병이나 당뇨병이 완화되면 그 때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어깨를 다쳐 염증이 생긴 사람에게 운동이라니 말이 되냐"며 "매일 2-3회씩 진통제를 맞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는데 교도소가 해도 너무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기간 최 씨를 진료해 온 대구 송현동 가야기독병원 담당사인 하영욱 씨는 "수술이 긴급하진 않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당뇨와 심장병이 있는 데다 어깨 수술은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 상태에서 당뇨나 심장병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교도소 의무과의 판단에 맞춰 수술일정을 잡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원방해 사실에 대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은 "재소자가 원한다고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청원수용 여부는 교도소가 아닌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행정법 제6조는 "재소자가 처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채로 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거나 발송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교도소의 불법적인 청원방해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이경재 씨, 장아무개, 유아무개 씨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유 씨는 교도소측이 행정법 관련 책자를 못보게 하고 서신을 제한하자, 법무부에 청원을 내리 했지만, 담당직원에 의해 불허당했다. (김보영)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 ◎ 개정 입장 표명 의원 (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춘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유삼남, 윤철상,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정언, 정동채, 정범구, 정장선, 정철기, 최재승
 (한나라당) 고흥길, 김동욱, 김부겸, 김정숙, 김호일, 박관용, 박병환, 박승국, 심재철, 안영근, 원희룡, 이부영, 이성현, 조정무
 (민국당) 강숙자 / (자민련) 없음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17일(토)

제 17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문제 돌파"

"노동자면 노동자이지 노동자에 '준'하는 게 뭐냐?" "비정규직도 사람이 다.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하루였다.

16일 오후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서울역 광장에서 올해 첫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엔 한국통신 계약직·이랜드 노조를 비롯해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 보조원, 흥익매점 판매원 등 특수근로형태 노동자들까지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 1천5백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으며, 얼마 전 결정된 복수노조 유보와 간간이 들리는 근로기준법 개악 소식 때문인지 매우 격양돼 있었다.

"오늘 1천7백명의 대우자동차 직원이 잠렸는데 그게 노동자 닷인가? 해외 도파중인 김우중 닷인가?" 서울역 맞은편 대우빌딩을 가리키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외치자 노동자들은 분노에 찬 함성을 터뜨렸다. 단병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권과 자본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 난국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힘을 합쳐 뚫고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탄도 이어졌다. 파업 2백일을 넘긴 한성컨트리클럽 노조 임재균 위원장은 "사측이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파업 2백50일을 넘기면서도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랜드 노조, 복수노조 금지에 묶여 노

조 결성조차 못하고 있는 흥익매점 판매원, 노동자에 '준'한다는 노동부 관정으로 인해 산재·의료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에서 배제된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연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규·비정규직 연대투쟁 강화 △산별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전담 특별기구 설립 및 기금 편성 △단위사업장 규약 개정 운동 등을 통해 전 조직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심태섭)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14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억지에 밀릴 대로 밀려 만신창이가 된 그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13일 밤에는 민주당사에서 법안 철회와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사지를 들어 길거리에 내동댕이치는 황극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최근 '개혁법안'이란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위 개혁법안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사실 인권사회단체들이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정을 거둬주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이것부터라도, 이것만이라도' 해결하라고 보내는 최후통첩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알맹이야 어찌됐든 개혁법안이란 이름만 붙여 생색내려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처리하는 태도다. 3년여가 넘는 국가인권위 추진 과정은 반인권적 폐약으로 점철돼왔다. 국가인권위의 감시 대상이 돼야할 법무부에 애초에 그 설계를 맡겼고,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박해오는 인권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현저히 상실된 국가인권위법안을 만들었고, 법무부가 언제든지 철폐할 수 있는 근거를 곳곳에 마련해 주었다. 3년여 넘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무수한 밤을 새우며 두 차례의 단식농성까지 감행했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법무부를 배후에 둔 위장 기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 피해자의 진실을 밝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는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만들기만 하면 인권단체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환상에 경고를 보낸다. 지금의 인권위법안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 아니면 우리의 비난과 저항을 끝까지 받아라.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무방해 안돼"

결핍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호 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기득권 세력의

관점에 선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은 것으로,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조)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 피고인: 박춘호(택시 운전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진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1. 2. 9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손지열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3대 개혁입법 쟁취 국민대회

- 2월 17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 내용: 문화공연 및 사회단체 연설

■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시국기도회

- 2월 19일(월) 오후 7시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순서: 기도회에 앞서 영상물 상영 및 노래공연→기도회(시국선언문 낭독)→대형 촛불 점화 및 점묵시위

■ 민주당 인권위법안 철회촉구 및 개혁실종 규탄대회

- 2월 20일(화) 오후 2시-3시
- 종로 탑골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3대 개혁입법 쟁취 1만인 선언 기자회견

- 2월 21일(수) 오전 10시 / 성공회대 대강당
- 주최: 3대 개혁입법 쟁취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행동
- 각 사회단체 대표자 2백여 명 참석예정

■ 민주당 인권위법안 철회촉구 및 개혁실종 규탄 사회단체 대표자 릴레이 단식농성

- 2월 21일(수) - 28일(수)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0일(화)

제 1796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이창조

DJ, 노동자에 전쟁선포하다

대우자동차에 경찰력 투입·농성 해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됐다. 4천2백여 명의 병력과 헬기 2대,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한 정부는 농성중이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6백 5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노조원 7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앞서 노조 지도부 34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며, 최중화 노조 대변인과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연행한 바 있다.

19일 오후 5시 55분경 전격 단행된 경찰의 강제해산작전은 불과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노동자들의 한겨울 저항이 있었지만, 과잉적인 병력에 밀려 모두 농성장에서 쫓겨났다.

지난 16일 1천7백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데 이어, 이날 대규모 경찰력까지 투입해 농성을 강제 진압한 것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의 '전쟁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부평공장은 이미 생산라인이 멈춰있는 상태였기에 농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성 사흘만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을 상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동계를 미리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노동자·회사 공생 방안 외면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으로서, 노동자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최중부도 이후 회사측은 줄곧 인원감축을 고집해 왔다. 그 숫자는 많게는 6천여 명이 넘었으며, 급기야 1천7백 50명의 정리해고로 현실화됐다. 반면,

노조는 "무급순환휴직의 실시와 적극적인 투자"등 독자생존 방안을 제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과 회사의 회생을 함께 도모하려 했지만, 회사측에 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리해고가 단행되기 직전에도 노조는 "노조와 회사측이 '5대 5'의 비율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4개월간 무급순환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자"는 양보안까지 내

놓았지만, 결국 되돌아 온 것은 정리해고 통지서였다.

한편, 농성장에서 밀려난 노조원들은 인천 산곡성당에 모여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날 경찰력 투입과 관련, 정권 퇴진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는 성명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모기를 위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위린한 김대중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노동자 민중이 김대중 정권과 공존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이상, 모든 역량을 동원해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 불사"를 선언했다. (이창조)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현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찢어집니다"

19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안충서 신부. 안 신부는 이날 '3대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천주교 시국기도회' 강론에서 정부를 호되게 비판했다. "개혁의 힘은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서 오는 것이 지 부당하게 선동된 여론이나 다수 의석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안 신부의 강론에 참석자들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개혁을 한답시고 수구세력과 손잡고 개혁법안들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에 쌓인 분노들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졌다.

기도회 끝자락 봉헌 순서가 되자 제단에 '국보법 법전, 인권과 평화의 저울, 확대 복사된 만원 짜리 지폐'가 올려졌다. 모두 3대 개혁입법 대상들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상징물 앞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향의엽서를 가져다 놓았다. 엽서들은 각각 민주당, 자민련, 한나라당으로 보내질 터였다.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레 쓰는 학생들, 엽서를 두 손에 고이 들고 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에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초 하나씩을 들고 명동성당 들머리로 나섰다. 점묵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보이는 것은 촛불로 환해진 얼굴, 그리고 들리는 것은 사진기 누르는 소리와 행인들의 집단분. 하지만 이들의 침묵은 그곳의 어떤 소리보다 더 힘찬 함성이 되어 외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올바른 국가인권위를 만들라,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이들의 '침묵'에 언제쯤 귀를 기울일까. (심태섭)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여성이라면 한번쯤 프리섹스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타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간혀버린, 거 추장스러운 나의 몸이 가장 저돌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리섹스주의는 나에게도 한때 막연한 동경이었다.

93년, 학내 활동가들 앞에서 직선간부 출마소견을 밝히는 자리였다. 고심하던 차에 던진 출사표의 서두는 이랬다. "나는 프리섹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권력 불평등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그럴싸한 "정치적"인 선동을 끌어내기 위한 대유법(프리섹스주의=자유주의)이었다. 운동사회의 성적 보수성과 경직성에 대해 의문을 품던 나는 프리섹스주의라는 언급만으로도 내심 만족하면서 우리의 프리섹스주의는 자유주의의 그것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엉성한 견해도 은근히 내비치고 싶었던 듯하다. 평소애 브레지어 안 입고 다니더니, 그게 프리섹스주의라고 선배들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놀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나 스스로도 여성에게 있어 프리섹스주의가 갖는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서 공개한 사례 중 친분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쟁에서 일부 남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은, 그 동안 내가 분열해왔던 프리섹스주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는 듯하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인 이들 남성들은 이 사례의 가해자가 단지 "플레이보이"일 뿐이며, 관계의 진정성 없는 성적 대상화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녀이데올로기에 물든 보수적 여성들"이라고 욕박지른다. 이 사건이 왜 성폭력 사건인가를 강조하기에는 짧은 지면이 아쉽지만, 성폭력과 성애를 구별짓지 못하는 성에 대한 남성 일방적 관점이 난무하고 있는 아찔한 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겠다. 성녀, 혹은 참녀로 구분되었던 여성들이 이제는 '프리'하게 '섹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 '순결이데올로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성주의자도 아니라며 마치 진정한 여성주의자는 모두 섹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세 등등 남성들만의 프리섹스주의를 설파한다. 그들은 성적 결정권을 박탈당해왔던 여성들의 양가의 갈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그들만의 성적 기호와 코드와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프리섹스주의를 찬양한다. 알싸한 석양이 유란선 동실 떠있는 바다를 홍조로 물들이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 그토록 낭만적인 분위기에 신나게 몰입해 가는 남자 친구와 다르게 간혀진 몸의 굴레를 벗어야 할지 말지, 먼저 자백할까 하는 이 땅 여성들에게 프리섹스주의는 한번도 그녀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의 성적 결정권을 보장받고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성적 권력을 누릴 때, 나도 프리섹스주의자가 되고 싶다.

- 엄혜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이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멤버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1. 노동자 대학살...자본과 정권, 노동자에 선전포고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2/16) ...노동자들, 부평공장에서 농성투쟁 돌입(2/17) ...정부, 부평공장에 경찰력 투입해 농성자 강제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 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전방.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거재판주의, 다시 승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치과 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4번째 재판에서 이도형 씨에게 무죄선고(2/17)

5. 시화호 골 보기 싫으면 세만금도...
정부, 87년 4월에 시작된 시화호 담수화 계획 15년만에 완전포기(2/12) ...한국해양연구소, '시화호 해수화해도 수질개선 어렵다' 발표(2/15) ...여야의원 일부, 세만금 예산 배정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단체 청원서명에 동조(2/18)

6. 지하의 볼테르가 통곡한다
국보법 개정조처 반대해온 이회창 총재, '정의로운 법만이 법이며,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말해(2/12) ...송석찬 의원, 이회창 총재가 민족일보 조용수 씨 사형 선고에 참가했다며 은퇴촉구(2/15)

7. 좀더 힘내세요!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실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가 행려자로 사망처리된 사실 밝혀내...당시 박 씨의 지문이 확인됐는데도 행려자 처리됨으로써, 고의적인 은폐의혹 제기돼(2/16)

◎ **수치로 보는 인권** ◎

1. 노동자의 삶은 고달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98년 신규취업자들 주당 3시간 더 일하고도 임금은 10만원 줄어(2/14) ...재정부, "2월 실업자수 1백만명 넘어설 것"이라 밝혀(2/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1일(수)

제 17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DJ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4백1명의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인권위법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훼손 △기구적 독립성 훼손 △조사범위 한정 △조사권 무장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부 여당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초라한 궤변과 파렴치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의 규탄성명과 항의행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누더기 인권법안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집회에서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민주당의 인권위 법안이 지난 1월 8일 민간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절 인권 침해 주범이면서도 죄를 면해왔던 김·경찰의 기득권을 법무부가 예뻐 비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인권기구가 구성될 경우 그것은 한국내의 반인권적 상황을 은폐하는 효과만을 발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대섭]

대우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노동계가 김대중 정권과의 전면전 불사를 선언한 가운데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거리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23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연기하고 인천 부평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복수노조 5년 유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20일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는 대우자동차,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시민·학생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자동차 공권력투입 규탄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선언했다.

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입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닥치는 대로 구속하고 탄압하는 거짓 인권 정책에 환멸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후 시위대는 부평공장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행진도중 대열은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져 전경버스 1대를 전소시키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경엔 경찰의 습격으로 흩어진 시위대가 산곡동 3거리까지 밀렸다. 시위대가 다시 모일까봐 작은 골목까지 배치됐던 경찰병력은 오후 6시 20분 경 산곡성당 구내까지 밀고 올라가 시위대 4명을 연행한 뒤, 성당 관계자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물러나기도 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노동당은 "왜 이토록 노동자들이 분노하는지 김대중 정부는 아직도 모르냐"며 "노동자들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김대중 정부"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권력 투입만이 대우자동차를 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없다"며 "회사 살리기에 앞장섰던 노동조합 의견을 존중하여 대우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11시3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금지'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 데 이어,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심보선]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지난 2월 9일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실는다. [편집자주]

"복수노조를 또 5년 유예시키겠습니까? 너무 심하단 생각 뿐이에요." 삼성에스원(세콤)의 전 직원 전명기 씨는 씩씩하게 내뱉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 탓에 단결권 행사를 봉쇄당한 경험이 있던 그것기에 실망은 더 크다.

지난해 5월 24일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다. 외환 위기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는 물론 상여금, 연·월차의 강제 반납 등에 줄곧 시달리던 때였다. 또 45살만 되면 회사의 강요에 밀려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들이었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고, 노조 가입자의 숫자가 며칠만에 3백72명에 달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들은 노조 설립이 좌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측이 제빨리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설립필증을 받고서는, 복수노조금지 조항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봉쇄한 것이었다.

"말로는 사무실도 갖췄다고 하지만, 노조란 게 조합원을 모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측이 내세운 노조는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유령이죠." 그 후 전 씨를 비롯해 처음에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5명은 사직을 강요당했고,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삼성의 이런 수법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7년 8월 창원의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신고조차 거부당했다. 노조를 만든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회사 쪽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하루 먼저 접수시켰

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수원 삼성코닝 사내기업 노동자들이 같은 이유로 노조 설립에 실패했다.

또 삼성생명의 노조는 노조위원장도 있고 형식적이거나 대의원선거도 하지 않던 회사 편에서 노동자들을 나몰라라 한다는 점에서 유령노조 못지 않다. 98년 1천7백명이 정리해고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한 일이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노조위원장이 출세의 지름길로만 여겨질 정도다.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체벌규정, 징계규정, 선도규정, 생활지도규정, 벌점규정, 용의복장규정... 중·고등학교의 학내의 활동과 관련해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목록들이다. 머리핀의 색깔과 크기를 정하는 데부터 학생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데까지 각종 규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지난해 12월부터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하는 '인권을 찾아 교칙을 찾아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학생수첩, 학교운영규정집 등의 교칙이 꾸준히 모아지고 있고, 교칙을 분석하는 청소년들의 토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산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곳이 학교임을 실감케 하는 낡은 학교 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이렇게 많았던가?'하는 놀라움이다.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윤아무개(18)군은 "선도규정에는 불온하고 불미스럽고 불건전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규제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중학교의 '갈색, 검은색, 근색 편 허용. 큐빅 핀 금지'규정은 지난해 두발자유화 운동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서울 7여상의 용의복장규정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여전히 운동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운동화가 손상시키는 학생의 품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청소년들의 의문은 당연하다.

청소년들의 궁금증은 용의복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왜 학생은 징계 다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없죠?", "왜 학생들은 진술할 기회가 없죠?", "왜 우리는 규정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나요?" 학생생활과 관련된 중·고등학교의 각종 규정을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청소년들의 질문은 날카롭다. "전에 대한학교의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 무척 간단하고 학생들이 함께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학생연합 회원 김아무개(17)양은 앞으로 대한학교, 열린학교로 알려진 학교의 각종규정과 일반 중·고등학교의 규정을 비교 분석할 계획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교칙 분석작업을 4월까지 마치고,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교칙을 분석한 자료를 5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 (고근예)

한편, 삼성에스원에서는 전 씨 등이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계속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회사가 계속 부당하게 나오니, 노조를 만들고 하는 건 당연할 밖에요"라고 전명기 씨는 말한다. 하지만 '유령노조'가 있고,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노조 설립 시도는 번번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삼성생명에서 해고된 후 2년 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성영주 씨는 잘라 말한다.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은 무조건 저지해야죠." 노조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든, 아님 제대로 된 노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든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철폐는 기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2일(목)

제 17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인권가면 벗고 광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기자들까지 막무가내로 때리는 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때리겠느냐?" 부평역 광장집회를 취재하고 돌아가다 경찰에 폭행을 당한 인천일보 기자의 말이다. 21일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부평역 광장은 경찰에 '점령'됐다.

경찰은 집회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젊은 사람,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차별 검문·연행해 반듯한 차림이 아니면 부평역 광장으로는 다니기도 힘들었다. 경찰은 경찰 버스 2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연행했다.

오후 2시 10분 무렵 부평역 광장으로 나온 한 여고생은 준비하게 늘어선 경찰을 보고 "지나갈 엄두가 안 난다. 한 정거장 더 가서 차라리 걸어가겠다"며 다시 부평역으로 갔다.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의 사회로 부평역 소풍물 앞에서 간단하게 치뤄진 결의대회가 끝난 시간은 오후 3시 10분. 경찰은 곧바로 시위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부평역사 방향팔고 3면을 에워싸고 광장출입구는 완전히 봉쇄했다. 시민 10여 명이 모이긴만 해도 곧바로 완전히 포위하곤 했다.

오후 3시 20분. 광장 전면에서 취재중이던 SBS 취재팀이 경찰에 폭행당했다. 시민들 통행을 가로막고 폭행하는 것에 대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경찰은 다짜고짜 폭행으로 응수한 것이다. 취재진들이 일제히 항의하자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지휘자는 "잘못했다. 봐달라"고 애원하기 바빴다. 그러나 경찰은 <SIPA PRESS> 기사를 구타했고, 인터넷언론 <노동의 소리> 카메라도 부쳤다.

이렇게 취재진들이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와중에 부평역 광장으로 나오는 출입구에서 비명이 터졌다. 노동자 1백여 명이 광장으로 나오려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 곤봉에 맞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광장을 가로질러 가려는 시민에게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울려퍼졌다. 이 시민은 "경찰이면 경찰 노릇이나 제대로 하지, 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 이를 보지못해 주위에 있던 50대 중반의 한 시민이 "경찰이 광패냐? 여기가 경찰 땅이냐?"며 "광패들도 이렇게 공공연한 짓을 못한다. 광패보다 더한 놈들이"고 질타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자 경찰은 그때서야 출입을 가로막은 것을 항의한 시민에게만 길을 비켜줬다.

20일 경찰이 시위대를 때리는 걸 말리다 오히려 폭행 당했다는 노인근 씨

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찾았지만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경찰을 고소해 본 때를 보이겠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경기본부장이 경찰에 맞아 코뼈가 내려앉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부상자가 늘어나자 민주노총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은 오후 4시 25분 광장 한 구석에서 "민주노총은 온 힘을 다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집중할 것"이며 "22일 오후 3시 부평역 광장에서 만나자"며 집회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우자동차공동투쟁본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일제히 "조직광패 수준으로 추락한" 경찰을 규탄했다.

21일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박용석(후생실장), 최인조(후생1부장), 김종진(소비조합부장), 김광제(조직1부장), 김일환(대의원), 이범연(해고자), 이찬호(해고자), 이재섭(조합원), 강진수(비상투쟁위원), 이용재(비상투쟁위원), 최규식(비상투쟁위원) 등 11명이며 22일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보선)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사회원로,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 등 1만 3천 6백여 명이 김대중 정부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선언 발표 자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송두환 공동대표는 "개혁이 없는 국민정부는 말짱 도루묵"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선언자들은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

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반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했다. (심보선)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설립필증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유보 결정은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2월 1일 강서구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어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이죠. 그 놈의 복수노조...” 지난 1월 17일 노조 설립 총회까지 마친 홍익매점 노조 손흥국 사무국장은 허탈해했다. 복수노조 유보 결정은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어렵게 싸워왔던 세월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조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우리가 국철 구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판대 판매직원들이다. 하지만 철도 노조에는 철도 판매원(기차 안에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판매원), 홍익회 4급 이하 사무직원 등이 가입돼있을 뿐 홍익매점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철도노조는 규약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성과급 영업사원들은 조합원 가입대상 아니”라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가판대 판매직원은 성과급 영업사원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는 강

서구청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고,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날에는 ‘홍익매점 노조 결성 무산’이라는 벽보를 붙이는 등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자극하기까지 했다. 장영석 노무사는 말한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한 통속이예요. 노조에 가입 안 시키려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이죠. 철도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보호하지만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뒷전이죠.”

홍익매점 노동자들의 고단함

지난 5년여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근로자성 인정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도 정작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해 그토록 염원했던 홍익회와의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은 꿈도 못 꾸다.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에 가입돼있는 철도판매원은 홍익매점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매년 임금이 오르고 법정 휴가도 얻는다. 그러나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365일 고된 업무에 쉬지도 못할뿐더러 오르지 않는 수수료 비율에도 불만을 나타낼 수 없다. 부친상을 당해 매점을 하루 단으려 해도 대리 판매원을 구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관리직에게 “당신 사정이 내 사정이 아니다”라는 매정한 추궁을 받기 십상이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홍익회가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개인적으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익회 측은 현재 홍익매점 노동자들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침을 택하고 있다. 이들을 아예 사업자로 만

들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같은 골치 아픈 요소를 미리 없애겠다는 심보다. 홍익회 측의 용역 전환 방식은 매우 끈질기다.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게되면 그나마 받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게 되고 안 그래도 팍팍한 이들의 삶은 점점 더 그늘질 것이다.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이철의 사무국장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노동자 지위를 고집하는 매점에 대해 홍익회는 회유, 협박, 방해 등으로 끈질기게 포기 공작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무실로 불러다 수 시간동안 면담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근무시간, 태도, 청소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경고조치한다는 것이다. 경고조치 3번이면 근로 계약 해지, 즉 해고를 당한다.

노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노조를 만들 수도 없는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용역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1천2백여 명 가운데 벌써 60%가량의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을 맺었다.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유보 결정 후에 그 수는 더 급히 늘었다.

이렇게 5년을 더 참으려고요?

“그냥 사표를 쓰든지 용역계약을 하라는 거죠.” 언제 경고조치 꼬투리를 잡힐지 몰라 4일째 그 좁은 매점에서 먹고 자고 있다는 손 사무국장의 말이다.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일용직이나 구해 볼까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당한 게 억울해서 못하죠.” 며칠 전 용역계약을 강요하는 관리직원에게 손 사무국장은 한 마디 말을 건넸다고 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복수노조 유보를 결정한 노동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손 사무국장을 비롯한 홍익매점 노동자들은 다시 5년을 더 싸워야 한다. (심대섭)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중·고등학교 교칙을 보내주세요
연락처:인권운동사랑방 / 전화 02-741-5363 이메일 youth@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3일(금)

제 17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성명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오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우리는 3년 전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졌음을 절감한다. 각종 인권영역에 있어 김대중 정부 아래 인권상황은 대체로 제자리걸음 또는 몇몇 중요 부문에서의 후퇴로 요약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인권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던 김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숭한 약속을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이 밝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을 정치 목적에 이용한 격이 되어 버렸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의 자신감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98년 6월 국제인권연맹 인권상 수상 연설)을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했다. “인권대통령으로서 남고 싶다”(1999년 5월 CNN 위성회견)는 소망과 “인권과 평화에 일생을 바칠 것”(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이라는 맹세는 김 대통령의 주요 어록에 기록됐을지 모르나 우리에게서는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 되었다.

취임 첫해는 IMF위기로 인한 기다림이 있었다. 2년째에는 이제 뭔가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3년째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인한 반전과 분발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우리의 인내와 기대와 경고를 모두 무시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전향제도의 다른 이름인 준법서약서를 도입했을 뿐더러 과거 독재자와 부정부패 사범과 얽어 암실수를 처리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는 아직껏 진전이 없다. 유엔의 기준에 부합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3년 내내 법무부에 끌려 다녀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법안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 IMF 위기와 구조조정의 터널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고 있고, 그 터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김대중 정권의 폭력으로 차단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체’와 ‘후퇴’요 ‘시늬’ 뿐이다.

우리가 보던대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김 대통령의 소망은 ‘인권 침해자로 남고 싶지 않다’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조건이 있다. 20세기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계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자’라는 평가마저 너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구명대상이었던 양심수 대통령, 인권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에게 인권단체가 등을 들린 현실을 직시하라. 김 대통령의 선전도구로서의 인권론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권 관련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0. 2. 2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락처:인권운동사랑방 / 전화 02-741-5363 / 이메일 youth@sarangbang.or.kr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폭력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 참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노동자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식사중인 노동자들을 마구가내로 연행하는 등 가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첫 장면. 22일 낮 12시 부평역 인근의 식당 두 곳에서 노동자 15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경관들은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연행했고, 6시간 동안 부평경찰서에 구금하다 풀어줬다. 연행된 사람들은 이날 새벽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대표자들이었다.

장면 둘. 22일 오전 6시 경남 창원 의 현대정공 앞을 경찰병력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현대정공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까지 창원대로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비슷한 시각 울산공설운동장 옆 공터 역시 경찰병력에 의해 장악됐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한 경찰의 변. "단체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개인별로 가는 것은 상관없다."

장면 셋. 22일 오후 2시 부평역 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노동자들은 오후 4시 인천대로 모였다. 이에 인천대 인근의 제물포역 주변에는 전투경찰이 3-4명씩 1조를 이뤄 배치됐으며, 전철역 구내 플랫폼에도 전철 출입문마다 2명씩 전투경찰이 배치돼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통제했다. 또 노동자들이 집결한 인천대 주변 도로 5-6백미터

내에는 차량동행마저 봉쇄돼 마치 계엄령이 선포된 거리를 방불케 했다.

성직자들도 분노

한편, 지난 20일 경찰이 부평 산곡성당에 난입해 성직자를 폭행하고 노동자를 연행한 사태와 관련, 전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21일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사건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사건의 전말을 호도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정평위는 "경찰이 '성당 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지휘관들이 제지할 겨를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평위는 "로만 갈라 복장의 양주용 부제가 미사 참례 하러 오는 신자들을 위해 정문 봉쇄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경찰이 성당 내라는 사실을 인

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또 "당시 성당에 있던 노동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피해서 왔고, 어떤 과격한 행동도 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폭력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1차로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문성현)이 오는 28일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정에 쫓기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부평 산곡성당을 근거지로 잡고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심보선/심대섭)

"스톱! 유전자정보은행"

참여연대, 캠페인 예정

보건복지부가 '미아찾기'를 이유로 개인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중단과 유전자정보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오는 26일부터 4월말까지 1만여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 서명운동과 거리 집회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창조) (문의: 02-723-4255/한재카)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4일(토)

제 18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정부가 대우차 사태로 노동계의 별집을 쫓아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를 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복수노조 5년 유예'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출한 '복수노조 3년 유예'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8명의 찬성을 얻은 '5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신계륜·박인상·이호영·박양수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김낙기·전제희 의원,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5년유예' 쪽을 찬성했고, 한나라당 김무성·박현규·김성조 의원은 '3년 유예' 쪽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파견철거공대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환경노동위 회의장 밖에서 점묵

시위를 벌이다 국회 직원들에 의해 전원 밖으로 끌려나갔다.

또한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은 23일 성명을 발표, "3

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합의 내용을 재고할 것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의 권리인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심보선)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도심 한복판을 장악한 경찰병력이 삼엄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성당이든, 식당이든 장소를 불문한 채 노동자를 잡아들이고,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사람에겐 곧바로 방패와 곤봉세례를 퍼붓는다. '계엄치하'를 방불케 하는 불법과 폭력, 요즘 인천시내의 모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백5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대우차 부실의 책임과 고통이 어찌서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대우차 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부채경영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자그마치 23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김우중도, 경영진과 금융기관, 정부관료도 모두 멀쩡히 둔 채,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조차 정리해고 대신, 노조에서 제안한 '순환휴직'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거역코 정리해고가 단행된 이유는 뭘까? 요컨대 해외자본에 팔아넘기기 좋은 물건으로 맞추기 위해 수천명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것. 그것이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앉아서 목을 내놓는 것은 미덕도 정의도 아니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각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장하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사람과 사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며 던진 메시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김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공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거기서 쫓겨나자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거리시위마저 봉쇄되자 '무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선택이었다.

정작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인권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하는 포장마저 거주장스러우니, 이에 노골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적으로 삼은 대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동법 날치기로 수명을 재촉했던 김영삼 정권의 교훈을 정녕 잊었는가?

노동열사 이옥순 민족통일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외협력국장이었던 이옥순(47) 씨가 23일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70년대 원풍모방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에 몸담아 왔다.

- 영안실: 서울대병원 영안실 9호.
- 영결식: 25일(일) 오전 10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21일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서울 화양리에 위치한 한 풍물패의 연습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주)세라톤 워커히 한식집 명월관의 노동자들.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고단한 하루의 끝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헤친다. 법외 노조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명월관 노동조합은 주례 회의를 위해 이날도 풍물패 연습실을 밤 시간 동안 잠시 빌렸다.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떼지 못하는 건 바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이다.

처음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마음을 먹은 것은 99년 8월경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했어요. 한달에 쉬는 날이 2번, 많아야 3번뿐이었죠."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수당도 물론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조직은 없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워커히호텔 노조가 있긴 했지만, 노조는 정규직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의 규약에는 모든 노동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워커히호텔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51%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제된 상태였다.

이에 명월관 노동자들은 99년 11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진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워커히호텔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3차례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명월관 노동자들은 독자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하라고 워커히호텔 노조에 요청했다. 하지만 워커히호텔 노조는 2000년 5월 2일 보낸 답변서에서 "한국노총과 이념이 다른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규약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단번에 명월관 노동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술 더떠 워커히 호텔노조는 명월관 노조가 노

동조합이나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칭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도 막상 명월관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 상안 되고, 사측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며 퇴짜를 놓는 이중성을 보였다. 명월관 노동자들이 법외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당연히 회사 쪽은 노조 활동을 압박했다. 회사는 노조 간부의 개인 우편물을 뜯어볼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노조원 3명을 부당하게 전직시키기도 했다. "주차요원을 세척조로 보내고, 웨이터를 석쇠 준비하는데 보냈어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거죠." 부당 전직을 당한 윤을 씨가 말했다.

"그때 집단 행동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전날 밤 노래방에서 두 시간 동안 돌아가며 연습한 구호도 외치구요." 하지만 당시의 집단행동에도 회사는 부당 전직을 철회하지 않았다. 사실 법외 노조 활동을 하면서 혐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은 그때만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들이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을 간절히 기다리는 건 당연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떳떳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서로를 다독거렸다. 그러나 난데없이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예한다는 노사정 합의는 좌절 그 자체였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구요." 조형수 위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운 내야죠. 동지에 덕에 이제껏 싸워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거 믿고 계속 싸워야죠." 21일 밤 노동자들의 힘찬 구호는 큰 울림이 되어 풍물패 연습실의 방음벽을 쳤다. "민주노조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주영)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지난 22일 오후 1시경 부평역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금속연맹 소속 노조대표자 17명은 경찰이 자진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직접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대표자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금속연맹 법률원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일 오후 5시30분 경 연수경찰서로 변호사를 급파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변호사들은 조사를 받던 노조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고 권유했고, 이에 노조대표자 17명이 형사계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때 김기덕 법률원장은 동행한 김성진, 박훈 변호사와 노조대표자들에게 "저지하는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불법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후 변호사들이 형사계 밖으로 밀려나고, 노조대표자 17명이 다시 갇히게 되자, 변호사들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감금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마침내 연수경찰서 수사과정의 요청에 따라 협상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결국 변호사들이 17명의 노조대표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용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23일 "이 사건은 각종 집회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던 경찰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히고, "경찰이 불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누구라도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법률원장은 또 "청원, 울산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부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위도 공무집행의 범위를 뛰어넘은 명백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연맹 법률원은 연이어 벌어지는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7일(화)

제 18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향한 대정쟁을 시작했다.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대책위)는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휠체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시위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54일 동안 진행된다. 오이도대책위는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수직형 리프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지금까지 철도청, 산업자원부 등 책임 당국에 사건 책임자 처벌과 장애인 이동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다. <본지 2월 7일자 참조>

지난 6일 서울역 지하철 선로 접거까지 하면서 '이동권 완전 보장'을 호소했던 장애인들은, 정부가 "경찰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항의해 다시 시위에 나서게 됐다. 오이도대책위는 당국에 △장애인편의시설안 전대책위원회 구성 △오이도역 사건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 사퇴 △산업자

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는 또 오이도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정당국, '쇠귀에 경 읽기'

오이도대책위 배용호 집행위원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곳이 행정부인데 법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막아 불가피하게 1인 시위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1인 시위는 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이면 모두 휠체어를 탄 채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1인 시위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26일 첫 시위자로는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나섰다. 27일엔 배용호 집행위원이 시위를 하게 된다. 국회나 대사관 주변은 현행 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1인 시위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근래 1인 시위는 국제청(삼성 변칙 상속 규탄), 미국대사관(한미행정협정 개정), 서울시청(박정희기념관 반대), 국회(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열리고 있다. [심태섭]

● 참여문의 : 전화 02-765-6835, 이메일 master@nodl.or.kr 홈페이지 http://www.nodl.or.kr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권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 및 집행 책임자들이 26일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인권단체 대표자 시위는 여·야 법안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권공대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공대위는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8일까지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날인 26일엔 곡노현 인권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이 시위를 벌였고, 이후 최민(한국장애인연맹),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신혜수(한국여성전화연합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 등이 나선다. [심태섭]

'3·1 시국 대회' 종묘에서 서울역으로 변경

일시및장소 : 3월 1일(목) 낮 12시 / 서울역 광장

내용 : 3대 개혁입법 쟁취, 언론·교육 개혁 촉구, 민중 생존권 파탄 규탄

참가 단체 : 인권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 언론공대위, 교육공대위, 민주노총, 비정규직공대위, 새만금공대위 등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공포로부터의 해방". 이는 1941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천명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지침이 된 네 가지 자유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요즘 그 구절을 기도처럼 읽는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 자체가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저 처참했던 한국전쟁 그리고 안보를 빌미로 남과 북에서 진행된 공포한 탄압과 폭력 - 정말로 한반도의 대지는 그 공포 속에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공포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것이며, 동시에 그 공포를 가중시킨 음험한 괴물인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인권의 봄이 도래할 날은 언제일까?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후, 김대통령은 귀국 제 일성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의 현대사를 옥죄고 있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것일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평화의 질박성이 느껴졌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1999년의 서해 교전만 하여도 얼마나 위협천만한 사건이었는가? 한반도의 휴전체제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으로도 쉽게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며, 평화를 향한 도정의 곳곳에는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감행되었던 미국의 이라크 공습은 1994년의 북한 핵위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핵 여부를 결정할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대북 강경파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클린턴정부 때와 같이 우리 햇볕정책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시행정부가 그 추진을 공인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다시 요동치게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NMD를 강행하여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과 핵군비경쟁이 촉발된다면, 그 대립전선은 어디를 경계로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우리 한반도의 허리, 곧 휴전선이 될 것이다.

다시 각성해야 할 때이다. 남-북 그리고 남-남의 분열은 외세의 부당한 개입을 불러오고 다시금 한반도를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해야 한다던 페리 전 미국무장관을 설득하여 햇볕정책을 뒷받침하는 페리보고서를 낳았듯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다시금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인권은 다시 전쟁과 폭력의 공포 속으로 함몰되어 버릴지 모른다.

정태욱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1. 무조건 막아라! 광기 서린 노동자 탄압.

경찰, 무더기 정리해고 혐의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우차 노동자 및 가족 들 강제 해산(2/19) ... 대우차 부평공장 근처 산곡동 성당 난입, 예비 사제까지 폭행하며 노동자 연행(2/20) ...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 무차별 연행 · 기자폭행 · 지방 노동자 집회참가 가로막아(2/21, 22, 23, 24)

대우차 노조 · 민주노총 등, 김대중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격렬 항의(2/20) ... 대우 정리해고 대상 1천7백50명 가운데 법 무시하고 산재환자까지 꺼여 넣은 사실 밝혀져(2/23) ... 대우차 노조,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2/23)

2. 개혁입법 뒷전, 노동법 개악엔 전광석화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로 넘어가(2/21)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결의대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 촉구(2/21)

3. 국민의 정부 3년, 말론인 인권 3년.

인권 · 언론 · 노동계 등 1만3천6백 명 시국선언,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제 · 개정 요구(2/21) ... 한총련, 한나라당 점거 - 이적규정 철회 요구(2/23) ... 전국연합 소속 9백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청년 70여 명 국회의사당 진입시도(2/25)

4. 정의는 제자리로, 원종모방 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 · 원종 모방 사건과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찬양 · 고무 혐의 무죄 선고(2/23)

◆ 해외소식 ◆

1. 아시아 지역 35개국, 일제 식민지배 책임규명과 보상조항 담은 선언문 채택 추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제출(2/21) ... 정신 못 차린 일본, "대동아공영은 아시아 발전에 기여했다", "외교관계 상관없이 '검정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역사 교과서 왜곡 방관(2/21)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다시 공영화, 한 달 넘는 전력비상사태 끝에 주 의회 법안 마련(2/21)

3. 국제전법재판소,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슬람교도 여성 성폭행한 보스니아인 유죄 인정(2/22)

4. 마르코스 부시령관 등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원주민 권리법 제정 요구하며 멕시코시티까지 평화행진 시작(2/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2월 28일(수)

제 180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이창조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 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전)이 열릴 예정이

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 · 경의 트집이 시작됐다.

출품작 가운데, '아! 한반도'(안성금 화백)에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인공기가 표현돼 있고, 다른 한쪽엔 성조기 안에 태극기를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공안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었다.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아! 한반도'는 어떠한 작품인가?

= 내 작품에 대해 다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김일성 부자의 얼굴은 세습체제를 상징하고, 성조기 안의 태극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종속된 남한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깃발은 상징물이며, 작가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고무찬양이라니,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태극기를 모독하는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

- 심경이 어떠한가? 예정대로 출품하는가?

= 완성된 작품도 보지 않고 전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보다 심한 검열은 없다. 경찰이 나중에 '협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작가 개인에게 엄청난 협박이었다. 예정대로 전시한다.

- 과거에도 이런 식의 검열을 받거나 처벌받은 일이 있었나?

= 작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시비를 건 일은 미술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협박은 처음이다. 작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예술과 인권전)에서 '악몽'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했다. 그 작품에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들어갔지만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그 작품도 남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의 상위법이고 '결면 걸리는' 법 아닌가?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반일 모두를 살인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지난 21일 사진으로 작품(당시엔 미완성) 소개가 된 다음부터,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아! 한반도'가 국보법 7조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작품을 만들면 화가는 물론 전시담당자도 구속이다", "그림을 전시하면 화랑 근처는 경찰들로 둘러쌀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갤러리 사비나에 해왔다. 또한 경찰은 박정희 · 전두환 등 전 대통령들의 목에 칼날이 하나씩 꽂혀있는 박봉룡 화백의 '칼을 받아라!'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성애를 묘사한 최경태 화백의 '여고생',은 풍기문란을 이유로 전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에 주축적인 갤러리 사비나는 "작품 전시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전시 금지 명령 공문을 보내줄 것"을 종로서에 요청했다. 그러나 종로서는 묵묵부답일 뿐 보안과 형사들의 간섭과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참다못한 갤러리 관계자는 종로서장 면담을 요청했고 27일 면담이 이루어졌다. 갤러리 관계자에 따르면, 면담 자리에서 서장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국보법 위반 문제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며 "미안하다. 밀의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전시회는 그냥 하라"고 했다. 다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며, 국보법 적용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갤러리 사비나 큐레이터 이희정 씨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이 창작행위에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발상자체가 웃긴다"며 "전시회 개최도 방해하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면서 말로만 미안하다는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안성금(44) 화백도 "작품의 의도는 내 양심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며 "이보다 심한 사상검열은 없다"고 말했다. [심태섭]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지난 1월 한미양국이 공식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4시20분 통일외교통상위는 소파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소파 개정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비준안 통과에 찬성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국민을 기만할 소지가 있다"(박상천) "신설된 환경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한번 개정되면 또 다른

개정안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장성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박상천, 이낙연, 유재건(이상 민주당), 박명환, 조승규, 김종하(이상 한나라당), 한승수(민국당) 의원 등 9명이 통과에 찬성했고, 이창복(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상임위 표결에 앞서 오후 3시 50분 경 심의과정을 지켜보던 김관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씨가 면도칼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그으며 "한미행정협정을 비준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의가 잠시 정화되기도 했으나, 의원들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김관태 사무처장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76바늘에 이르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심보선)

소파개정안 통일외교통상위 통과
규탄과 국회 비준 반대, 제협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민행동의 날 집회
2월 28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노동·법조·인권·종교계 인사 472명이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연대투쟁을 천명했다.

27일 오전 기독교시민연대, 노동자 의회 등 18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헌법적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복수노조금지의 반인권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복수노조 유예결정은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악의 서곡"이라고 비난하며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권에 대한 총체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노동계 외에 법조계 67명, 인권사회운동계 28명, 종교계 62명, 학계 62명 등 각계 인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민주노총 등은 2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심보선)

기자의 눈

'좌익사상'이 뭐길래

수많은 시민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한복판 종묘공원 앞에 커다란 입간판 하나가 서 있다. 거기에 쓰인 문구는 "신교하는 국민정신, 사라지는 좌익사상".

서울경찰청 명의로 세워진 이 입간판의 메시지는 '좌익사상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신고해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측은 26일 "경찰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각 관할 경찰서에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혀 같은 내용의 입간판이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음을 시사했다. 입간판의 의미에 대해, 경찰청 보안과 계도간관 담당형사는 "계도간관을 세워왔던 전통은 60년대 '무찌르자 공산당' 시절부터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 담당 형사는 "현재 남북대치 국면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고조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좌익사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신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스스로도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좌익사상'에 대해 "수상한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 "국가에 반대되는 사상",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는 등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종묘공원을 지나던 시민들은 "좌익사상이 뭐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도간관. 그 기능은 '좌익사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비판세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뿐이다. 사상의 자유, 비판과 견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 구시대의 유물은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2001년 3월

(제1803호 - 제1824호)